

Ma.a.3

세계 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

- 98'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워크샵에 즈음하여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5층 우 136-041

T.02-744-9063 F.02-766-5895

천리안 : JCMK

E-mail : jcmk@chollian.net

<http://kpd.sing-kr.org/jcmk>

세계 이주노동운동 관련 최근자료 번역집

- 98'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워크샵에 즈음하여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12-1

삼선빌딩 5층 우 136-041

T.02-744-9063 F.02-766-5895

전리안 : JCMK

E-mail : jcmk@chollian.net

<http://kpd.sing-kr.org/jcmk>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1998년 9월 10일 발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1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1-1
 120-0112 서울특별시 남산동 2가 11-1
 TEL: 82-2-367-3094 FAX: 82-2-367-3892
 E-MAIL: kltmk@kltmk.com
 http://www.kltmk.com

목 차

국제정세	▶▶▶▶▶▶▶▶	6
이주민 인권문제	▶▶▶▶▶▶▶▶	65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NGOs 활동	▶▶▶▶▶▶▶▶	163
여성 이주민 노동자	▶▶▶▶▶▶▶▶	251
별첨자료	여성특력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예비보고서	
별첨자료	ILO 자문대상 핵심협약	

1998.9.10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료모음집 편집팀]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자료모음집을 발간하면서...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IMF를 맞이하였다. 경제력이 약한 기업부터 문을 닫듯이 3D 영세 산업에 근무하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 보다 먼저 실업자가 되었고, 폐기처분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는 갈 곳이 없다 한다. 그나마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도 공장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져 빈 공장에 이주노동자만 남아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가는 비행기표도 살수가 없어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98년 5월 24일 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실업이 극심하던 지난 3월, 그도 실업자가 된 상태에서 갈곳이 마땅치 않자 친구들이 일하는 기숙사에서 사장 몰래 도둑잠을 자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가스불을 켜다가 조작을 잘못하여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2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사망하였다. 한국에 올 때 5백만원 빚진 그는 화상 당하여 죽고 나서도 병원비 1,900만원을 빚지고 세상을 떠났다.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결국 2,400만원 빚이 전부였다. 이주노동자는 빚잔치라도 하듯이 육신의 가죽만 남기고 이승을 떠나갔지만,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이유로 사망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을 내 보내주고 있지 않다. 시신의 육신은 물이 되어 거이다 증발되고 수의와 뼈만 남은 상태로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인생을 바꾸고, 오히려 2,400만원 빚지고 세상을 떠나간 이 이주노동자의 상황이 최근 IMF를 맞이한 이주노동자들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는 경제상황 악화로 이주노동자를 추방시키고 있지만, 실제 동아시아가 경제공황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업이 증가하면서 난민이나 제 3국으로의 이주 노동을 하려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 노동계약이 끝나지 않은 합법 이주노동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백만명 정

도를 귀국 조치시키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해군은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되는 수천 명의 자국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송선박을 준비시키기도 하였다. 태국 정부 역시 98년부터 3년간 매년 30만~5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자유롭게 직업을 구해 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출국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역시 30만에 육박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간 상황이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이주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출국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 97년 ILO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7천만~8천 5백만명 정도가 이주노동자이거나 국적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6~9백만명 정도가 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들어 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만 아니라 난민의 숫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다. 국제연합고등판무관 (UNHCR)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75년 2백만 하던 국경을 넘은 난민이 2백만 하던 것이 95년에는 2천7백만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한국 내에서도 망명 신청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태리에 천 여명의 쿠르드족 난민이 유입되는 사태를 계기로 하여, 유럽 각국은 이들이 중·서유럽으로 대량 이동해 올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끝이 보이지 않는 난민촌들이 보다니은 먹거리를 찾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점점 난민이 이주노동자의 숫자로 점점 흡수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민의 정치는 이주민의 유입을 저지하는 쪽 보다 전 세계 노동시장을 반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야 자본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경 없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방인이 된다. 주권이 없는 그들은 난민이거나 이주노동자인 나그네로서의 혐오의 박해를 받아야 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에 직면해야 하고, 경찰의 억압과 배고픔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 98년 들어 중국으로 숨어드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역시 중국에서 난민으로 이주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30~60% 정도가 직업이 없이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는 비단 가난한 아시아의 문제만 아니라 비교적 경제 기반이 있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국경을 넘은 가난한 사람

은 이주노동자가 되지만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은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구촌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유럽 통계청(유로스타트)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의 평균 실업률은 10%를 넘었다. 미국의 2배, 일본의 3배다. 경제 대국인 독일의 실업률은 10%대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2%를 넘었다. 스페인은 무려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대국으로 자처하는 영국만이 7%로 체면을 유지했다. EU 15개국의 실업자 총수는 1천8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EU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액 등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하다. 그러나 고용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수출은 급증하는데도 기업들은 고임금을 피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자동화 투자로 인력 절감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전후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신자유경제 체제의 세계화는 약육강식의 다른 말이며, 경제에 의한 사람의 지배를 의미한다. 경제발전은 언제나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다. 세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 경제체제는 자신의 체제를 온존 강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의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을 부추 키고 있다. 저임금과 높은 강도의 노동에 의해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한 노동의 저항을 해체, 제약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시아의 가난한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자유지대의 본토인의 노동과 국제적 이주노동, 실업의 강요는 모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초국적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하여 치외법권적 지대의 확대 및 비정규적 노동의 축적(노동의 유연성 확보)을 목표로 국내외로 노동의 이주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이며, 그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는 언제나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정책은 한국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는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노동자들로부터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거나 국내 노동정책의 관심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제금융의 횡포와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으로 통제, 관리, 활용,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00만이 넘는 실업자(98년 9월 기준)가 발생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보면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로만 놓고 보았을 때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IMF로 빚어지는

국내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하나임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자국내의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와의 차별정책을 통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는 초국적 자본이 바라던 바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호는 가난한 나라들은 불평등한 무역 조약에 희생시키고 가난이라는 굴레의 순환은 결국 이주 노동을 자극한다. 무역 자유 지대의 설치하는 자국의 발전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왜곡시키며,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사이의 국제적인 노동 분할을 반영한다. 새로운 경제 정책은 자국민을 농촌과 도시에서 해외 이주를 자극한다. 강요된 이주 노동에 의한 해외 취업과 자유무역 지대에서 일하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는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인간이기 이전에 값싼 노동력이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상실 당하고 있다. 세계화 구호 속의 '발전'은 경제적 성장의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소수에 의한 독점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신분적 취약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게 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차별과 탄압을 방어하는 단편적인 인권문제의 넘어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 '공존'의 문제로 확산되어야 한다. '경쟁'과 '독점'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 인류가 공존으로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사과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의 지도자 마르코스는 전세계적인 '반 신자유주의 민중연대'를 구성하여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위한 아시아 민중연대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고, 국제금융(IMF, IBRD 등)과 다자간 협력기준(WTO, MAI, UR 등)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수도 있다. 신자유체제에 대응하는 대안사회운동으로서 몬드라곤과 같은 '협업운동'이나 '생산자 공동체 운동' 혹은 '우리사주' 같은 방식의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한 '대안기업운동'의 대안활동이 전개 될 수도 있고, 아예 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면서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와 같은 운동방식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신과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의 연구가 물질에서 마음으로 이동하면서 우주과학을 이야기하고,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다주기 시작하면서 일기 시작한 신 인간운동의 형태로 전개 될 수도 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이주

노동자의 운동이 바로 세워지려면, 운동이 이루어지는 근원을 찾아서 그 현상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운동의 기본 관점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드 슈만은 '시장의 정글의 법칙'을 무기로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가 20%의 행복과 80%의 불행한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라 비판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연대해서 양육 강식의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비전을 심어야 한다.

본 자료모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한 번역팀의 조수경, 김주영, 노승영, 전종희, 강민정, 조연숙, 김태경 등 자원활동가 여러분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여러분과 총주관한 정혜원 국제협력부장, 그리고 이운주 사무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8년 9월 10일 서울국제민중회의 이주노동자 포럼에 즈음하여,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박천웅

☺ 자료모음집 편집팀에서 ☺

정보통신망과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연대 활동에 힘입어 좋은 자료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입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함이 아쉬워서 덤벼든 작업이었습니다.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는데 비해 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계속 밀려드는 것을 공포스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원고들과 한 여름을 지낸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좀 더..." 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모쪼록 현실의 무기가 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쉽게도 시간상의 부족으로 이번 '자료모음집'에 실리지 못하는 글; '세계화와 지역화에 도전하는 정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세계적 빈곤', '다자간 투자 협정의 권력 망상', '2000년까지의 경향-ILO' 및 '98' ASIA MIGRANT YEARBOOK의 일부분을 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재정비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정세

금융위기와 아시아

<호랑이 길들이기>는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토론에 제출된 기고문이다. 특히 아시아 추락의 핵심 행위자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활동과 동기를 탐구한다.

이 보고서는 방콕에 소재한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런던에 본부를 둔 카톨릭 원조기구 CAFOD의 공동성과이다. 보고서는 교회 단체들, 노동조합 그리고 빈민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아시아의 여타 풀뿌리 조직들의 경험과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호랑이 길들이기>는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세 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위기의 인간적 충격이 탐구된다. 이 장(章)들은 IMF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실패의 세밀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기구들과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대한 권고로서 끝을 맺는다.

IMF에 의해 강요된 해결책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시아적 발전 모델에 대한 무비판적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 체제는 보건, 교육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빈부격차 심화, 환경 착취, 자연자원에 대한 공공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나 정치적 참여 확대가 결여된 성장 등을 비추어 본다면 그 대가는 너무 큰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IMF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혜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IMF의 신자유주의적 십자군들의 고삐를 당길 수 있고 대안이 탐색될 수 있다면, 현 위기는 아시아에게 최근 몇 년의 파괴적 발전 경로에 대한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시아의 보통사람들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황금기로 회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진실로 1997년 "구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극적 고백이 될 것이다.

- 번역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호랑이 길들이기

-Focus on the Global South

저자 서문

글을 쓰고 나서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한국의 경제, 사회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아시아 위기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급격한 변화는 IMF가 강요한 석유보조금 인상으로 불붙은 학생들의 저항, 대중들의 시위와 폭동이 지난 5월 7일, 마침내 대통령 수하르토를 32년 동안의 무소불위의 권좌로부터 물러나게 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붕괴는 수십년간 심화되어 왔던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들춰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하비비는 국내적으로는 대중적 지지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민중들은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폭발시키고 있다. 북수마트라에서는 어민들이 현대적 트롤 어선을 부숴버리면서, 어선 때문에 지역의 생선비축량이 줄어든다고 비난을 했다. 자바섬의 북쪽 해안가를 따라, 사람들은 상업새우농장을 습격했고, 자바 동쪽지역 민중들은 자기 선조들의 것이었던 삼림이 불법적으로 탈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업농장의 티크나무들을 베어버렸다. 루피아화는 10,000에서 14,000 달러 사이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고, 외채는 GDP의 162.7%로 엄청나게 늘었으며, 성장률은 -15%에서 -20%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98년 상반기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80.6%가 되었다. 확실한 것은, IMF의 정책이나 수하르토의 축출 어느 것도 위기를 완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과 한국 역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태국은 98년 한해동안 적어도 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바트화는 달러당 40바트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동남아) 지역의 미세한 혼란에도 격렬하게 반응한다. 태국과 한국 두 나라는 모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은행 준비금을 적립하기 위한 IMF의 고금리 정책의 경기후퇴적 영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동성의 위기는 지역의 중소기업들로부터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다.

금융기관과 은행의 구조조정 그리고 자본재구조화는 점점 많은 채무자들을 양산했던 계속된 불황으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지리하고도 값비싼 과정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은행 지원 비용은 정부가 집행하는데, 이는 이들 나라 국민들에게 앞으로 20-30년 동안, 지역과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대부분 민간부문 때문에 생긴 외채에 대한 추가적 세금 부담을 안겨준다.

세 나라 모두에서, 공공 설비의 민영화와 무역, 금융 투자의 자유화는 빠르게 계속되고 있다. 수하르토가 사임한지 3주 만에, IMF는 12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8개의 외국은행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낮게 평가되고 인도네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IMF와 외국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서조차 많은 의심이 존재하는 그런 정치경제적 혼란의 와중에 대중적 토론조차 없이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인들은 수하르토라는 지역(세계전체와 비교했을 때 지역이라는 의미: 역자) 권력을 쫓아내놓고는 결국 자신들이 해외 초국적 자본과 은행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나라는 모두, 특히 늘어나는 실업과 빈곤이라는 극심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탄력적 조치가 불길 했지만, 여전히 IMF 조건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시장과 기업의 해외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고금리, 국가 역할의 축소라는 IMF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3월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전세계 경제는 막 붕괴하려 하고 있다. IMF는 자신의 그 부적절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 위기를 자신들의 무역, 투자 그리고 안보의 이해를 해당지역에서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글을 쓰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지금, IMF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개혁과 국제적 금융흐름의 통제와 제약이라는 이 글의 결론과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며, 더 긴급한 것이 되었다.

방콕 1998년 8월 14일

<목차>

요약

1. IMF와 태국

2. IMF와 인도네시아
3. IMF와 한국
4. 위기의 사회적 충격
5. IMF의 역할
6. 결론과 권고

요약

1997년 후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동남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강타한 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적 위기이다. 수십년 동안의 사회적 진보가 후퇴하면서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가난과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 남은 1998년,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 폭동과 항의시위가 확산되자 국가의 장기 생존능력이 위기에 처하였다.

● 그것은 세계화의 위기로서, 급증하는 세계 자본 흐름과 결합된 빠른 자본 이동 자유화에 정부들이 얼마나 대처능력이 없는가를 폭로해준다. 특히, 이제는 이자를 감당할 수조차 없게 된 사적 부문의 높은 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즉, 자본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으며 각국 정부들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 외부 환경을 따라잡을 만한 투명성, 제도적 능력 그리고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자유화는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발전과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그것은 국제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이다. 지금까지 IMF의 아시아에서의 활동은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IMF는 그 지역의 병에 대해 사회적 재앙을 불러오는 잘못된 약을 처방해왔고 설립협정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을 심각하게 넘어섰으며, 주된 주주(株主)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너무 친밀하고 게다가 거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IMF의 실패는 위기의 인간적, 거시경제적 충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각국 정부는 :

- 국제수지 위기시의 최종대부자로서의 IMF의 본래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
- IMF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 이동 자유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권한확대와 같은, 설립협정 조항의 수정을 반대해야 한다.

- IMF 자금지원으로부터 무역, 투자, 민주화 그리고 적절한 관리 등의 모든 조건을 분리해야 한다.
- 사적 영역 부채 위기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해결과 국제 자본 이동, 특히 투기성 단기 자본 이동의 규제를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모색하여, 그것들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시아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미래에 발생할 유사한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런던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부들은 위에서 말한 개혁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IMF와 다른 무대에서 그들의 투표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1. IMF와 태국

친밀한 관계

태국의 금융 위기는 1997년 7월2일 바트화의 사실상 평가절하로 인해 극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1996년 말까지 IMF는 막대한 자본 유입을 약간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 정책의 일관성 있는 기록"¹⁾을 보이는 태국정부를 칭찬하고 있었다.

IMF와 그 자매기관인 세계은행의 태국에 대한 자만심 - 사실상 위험신호에 대한 그들의 감지 실패 - 은 몇가지 요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IMF와 세계은행이 자본 이동의 개방성과 높은 성장률을 갖춘 태국(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은 1985-95년의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을 나머지 제3세계의 발전 모델의 도구로 추켜세우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태국이 아시아의 "다섯번째 호랑이"로 공식 선포된 것은 어쨌든 1991년 9월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대부의 형태로 태국에 유입된

1 Quoted in Robert hote, "Thai Crisis Highlights Lessons of Mexico," Survey, Financial Times, 19 September 1997, p.16

엄청난 자본이 적자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채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실 1990년대 초의 높은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가 흑자 재정을 운영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대학교 경제 연구·계획 대학원의 몇몇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침묵의 이유 중 일부는 국제수지가 정부 예산의 적자가 아니라 ‘단지’ 민간 국내 저축에 대한 민간 투자의 초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관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1991년의 인도처럼 상당한 재정 적자를 진 나라들은 그들의 외채가 태국보다 훨씬 낮을 때조차도 낭비하는 나라로 간주되었다.

태국의 외채는 정부가 아니라 사적 영역이 끌어온 것이므로 그저 “공공의 혹은 민간의 낭비가 아니라 외국 민간 투자의 적절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시장의 기제들에 맡겨두면 시장이 민간 국제채권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 민간은행과 기업들간의 자본 거래 속에서 균형이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태국은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자국에 촉구된 전면적 금융 자유화의 길을 따라 비교적 많이 나아갔다. 1990년과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 아난드 파나리춘(Anand Panyarachun)의 자유주의적 기술관료 정부와 그에 뒤이은 추안 립 파이(Chuan Leek-Pai)의 첫 번째 정부하에서 금융제도를 탈규제화하고 개방시키는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수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 여러 종류의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한도의 철폐
- 금융기관과 상업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더 적은 제한. 예를 들어 상업적 은행의 지급준비금 요구 비율을 유동성 비율로 대체하기.
- 상업적 은행과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더 느슨한 규율
- 모든 중요한 외환 통제의 제거
- 방콕외금융시장(BIBF)의 설립

방콕외금융시장(이하 BIBF; 역자)은 아마도 금융 자유화를 위해 태국이 취한 가장 중요한 조치일 것이다. 이것은 국내의 은행들이 역외와 역내 모두의 용자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체제이다. BIBF 면허자들은 국내와 해외투자 모두를 위해 외국통화로 예금을 받을 수 있고, 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들에게 외국통화로 대부를 할 수 있다. BIBF 달러 차관은 곧 방콕으로 흘러드는 대부분의 외국자본을 위한 통로가 되

었는데, 3년 동안 약 500억 달러나 되는 돈이 유입되었다.

태국의 자유화는 불완전했지만 IMF는 태국의 거시경제적 금융 전략의 다른 두 개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않았다. 높은 이자율의 유지 - 미국이자율에 비해 약 400-500 기본포인트나 높은 것 - 는 아마도 외국자본이 태국으로 오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유인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빠른 성장의 맥락 속에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IMF 공식이었다.

외환시장에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이 개입하여 1\$당 25바트로 환율을 고정하는 것은 아마도 투자자들이 평가절하에 의해 무방비로 당할 걱정없이 달러를 바트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IMF는 개발도상국의 변동환율제를 옹호한다는 평판을 갖고있지 않았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변덕스런 국제수지로 개도국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국정부가 1997년 7월 중순경 IMF에게 자국경제를 구하러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은 IMF가 예측하지도 우려하지도 않았었던 문제 (사적부문의 과다차입)를 야기한 IMF의 처방(자본이동의 자유화)을 그 근본원인의 하나로 하는 위기를 해결하러 와달라는 것이었다.

태국이 7월초 바트화의 붕괴이후 IMF에게 원조요청을 위해 접근했을 때 그것은 알송달송한 표정으로 코치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운동선수나 다름없었다 : “뭐가 잘못된거죠? 난 그저 코치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그러나 그때쯤 IMF는 위기발생에 대해 태국에게 계속 경고해 왔다고 말하며 역사를 고쳐쓰느라 바빴다. 이것을 두고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다음과 같이 비꼬았다. “IMF가 7월에 태국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을 때 사실상 “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게 경제 관리에 대한 높은 점수를 준 IMF의 1997년 연차보고서는 아직 잉크조차 마르지 않고 있었다!”

IMF와 정부는 8월20일에 발표된 합의를 위해 거의 한달이나 협상을 했다.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공여국이 제공하는 167억달러 - 후에 172억 달러로 늘어남 -를 받는 대가로 태국정부는 두 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담은 안정화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첫째, 안정화 프로그램. 높은 이자율의 유지와 “1998년까지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소규모 흑자”의 달성을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인다. 공공부문의 흑자는 부가가치세(VAT)비율의 10%로의 인상, 많은 영역에서의 경비절감, 몇몇 공익사업체와 석유

생산에 대한 보조금 중단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취한다.

둘째는 금융부문의 구조 개혁이었다. IMF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략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의 우선적 분리, 영업중지, 재구조화라는, 나머지 금융체제에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들과 FIDF(금융기관발전자금)자원 확대에 대한 엄격한 조건 그리고 건전한 금융부문의 재건을 위한 더 광범위한 구조개혁의 단계적 실시가 있다.”

금융개혁의 일부는 또한 “나머지 모든 금융기관들이 신속하게 자신들의 자본기반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해외자본유치뿐만 아니라 합병을 촉진하는 정책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우려

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의 폐쇄였다. 바트화 평가절하가 있기 전에도 차왈릿(Chavalit) 정부는 한때 태국 최고의 금융기관이던 파이낸스 원(Finance One)을 포함하여 16개의 금융기관을 영업정지시켰다. 합의문 발표 당시 정부는 42개가 더 영업정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태국의 92개 금융기관 중 모두 58개가 문을 닫는 것이다.

이 정책은 꽤 인기가 있었다. 금융기관들은 부도가 날 것이라고 널리 알려졌었고, FIDF(금융기관발전자금)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았던 170억바트의 돈을 금융기관들은 용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아니라 재대출에 써버려서 외양만을 확대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IMF는 정부가 구제받을 수 없는 그 회사들의 폐쇄를 빨리 결정하길 원했다.

안정화 정책에 관한 IMF가 가졌던 의문은 과연 정부가 세금인상의 합의, 특히 석유에 대한 세금인상 합의를 밀고나갈 수 있는가였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게 될 프로그램의 적실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높은 기업 부채율과 수입품의 바트화 표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이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간부문의 동력 상실로 인해 정부의 자본지출, 특히 기간산업지출은 1996년에 성장을 촉진시킨 주요 요소였다. 이 자극제를 제거하는 것은 둔화된 경제를 (오히려) 침체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런 걱정은 더 큰 우려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태국의 금융위기가 민간부문의 과잉에서 비롯되었는데도 IMF는 공공부문 낭비에 대한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공공부문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가라앉지 않게 유지시켜줄 역주기적(counter-cyclical:逆週期的) 기제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주요주창자인 제프리 삭스가 말했듯이 “이 지역은 마구잡이식의 예산 삭감, 대출요건 강화, 긴급 은행폐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해외용자의 감소를 상쇄시켜줄 안정된 혹은 심지어 약간 팽창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다.”

삭스는 더 나아가 IMF의 행동이 1997년 가을에 이미 미묘하던 상황을 사실상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IMF는 그 무시무시한 발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고이자율과 예산 삭감 그리고 즉각적인 은행폐쇄같은 처방을 제안하여 아시아가 정말로 심각한 경기위축에 돌입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도 공황의 두려움을 심화시켰다... IMF는 불을 끄는 대신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른 셈이다. 같은 장면이 12월에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반복되었다. 그때쯤 공포는 거의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다.”

또 다른 우려는 구제자금 172억 달러의 실제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 8월20일 합의는 이 돈이 “오직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고 태국은행의 공식외환보유고를 재건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는 자금이 국내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는 그러나 1997년 중반에 720억 달러에 다다른 태국 민간부문의 거대한 외채의 이자를 대주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 외채의 절반 이상이 단기 부채였다. IMF가 모은 자금은 민간부문의 즉각적인 이자 상환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되어주었다. 그러는 동안 정부와 IMF는 채권자들이 차관을 만기연장해주거나 재조정해주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구제합의는 1994년 IMF-미국의 멕시코 구제금융과 1980년대 외채위기시 채무국과 IMF의 구조적 합의의 패턴을 반복하였다. 거기서 북반구 납세자들의 돈은 채무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결국 상업적 은행 채권자들에게 이자명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태국에게는 전면적인 시장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적인 민간 행위자들은 (제재를) 면제시켜주는 - 정말로 그들의 손실을 사회화시켜주는 과정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다. 네이션誌가 표현했듯이 “태국 민간부문에 대출을 해준 외국 채권 은행들에게 부과되는 제재도 정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태국과 태국 회사들이 금융위기의 주된 책임을 떠맡아야 하겠지만 외국은행들도 역시 신중하지 못한 대출을 했으므로 비용의 일부를 나눠맡아야 한다. 태국

만을 전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주저하는 차왈릿 정부

정부가 안정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데는 또 2개월이 더 걸렸다. 10월 14일 태국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예산흑자를 달성하기로 한 IMF와의 약속을 강조했는데 그 방법은 사치품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부문에 사용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가솔린 1리터당 1바트의 연료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세법안의 선포였다.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이 1천억 바트 가량 삭감되어 총 8230억 바트로 줄어들었다.

금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58개의 영업정지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의 심사를 감독할 금융재구조감독원(FRA)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그 회사들이 문을 다시 열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10억 바트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AMC)가 설립될 예정인데 그것은 폐쇄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들의 자산 처분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의 금융기관 지분에 대한 100%까지의 소유 허용, 불이행 차관 분류의 규정 강화, 예금주와 채권자에 대한 전면적 정부 보증 제공 그리고 채권자들의 더 신속한 담보물 회수를 가능케 하는 파산법의 개정 등을 약속했다.

이 시점에서 IMF의 주요 관심사는 이 약속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반대로 인해 차왈릿 정부는 석유세 조치를 발표 3일만에 철회해야 했다. 경제의 파국에 책임이 있는 정부는 자신의 결정을 관철할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내각 또한 금융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긴급 조치들을 승인하는데 실패했고 폐쇄시킬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질질 끌었다.

재무장관 타농 비다야(Thanong Bidaya)가 석유세 철회로 사임했을 때 차왈릿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긴장과 혼란의 증가가 다음의 설명에 잘 묘사되어 있다: “10월말과 11월초에 IMF가 12월로 예정된 대기 차관(stand-by credits)의 두 번째 단계를 정지시킬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전국 시장을 휩쓸었다. IMF관리들은 개혁의 느린 속도와 문제의 심각성을 단호히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여러 차례 좌절하고 있었다. 외국채권자들은 그들의 신용라인을 끊고 태국금융기관에 대한 미이행 차관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바트화가 달러당 42까지 떨어지자 태국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타났다.”

바리케이드의 다른 쪽에서는 거리 시위가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고 많은 항의시위가 반IMF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비평가들은 더욱 소리높여 긴축 통화, 긴축 재

정 정책이 오직 병을 악화시킬 뿐인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두명의 영향력있는 분석가들이 표현했듯이,

“IMF 관리들은 일단 자신들의 긴축 경제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수행되기만 하면 신용도가 회복되고 자본이 다시 유입되어 유동성을 개선하고 바트화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 밖으로 계속 빠져 나가는 자본으로 인해 마비되었다.” 그러는 동안 “자본이 없는 태국 기업은 전체적으로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

구제를 위해 등장한 추안(Chuan)

대중과 IMF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차왈릿 정부는 마침내 11월 3일 - 정부의 합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IMF 팀이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 정부가 퇴진하며 새로운 의회 동맹이 정권을 이양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왈릿 정부의 퇴진발표와 두 번째 추안정부 성립 사이의 기간에 IMF의 압력은 국회로 하여금 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개의 긴급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했다.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IMF는 정부가 일정한 지연 없이 폐쇄될 금융회사와 회생될 금융회사를 빨리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정말로 IMF는 8억 달러의 추가적 지분(tranche)<역자 주 : 국제수지불균형시 IMF회원국은 일정량을 차입할 수 있는데 자국이 IMF에 출자한 자금(IMF쿼터)의 25%를 한 단위로 한다. 그 단위를 지분이라 한다>의 제공 여부를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주IMF 미국 대표단의 카린 리사커스(Karin Lissakers)는 태국의 이행여부가 “우리가 정치적 저항을 극복했다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12월 7일에 추안 정부는 58개 금융회사 중 두 곳만을 제외한 전부가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 자금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 표명에 대한 찬사는 정부가 8월 합의시 2.5%였던 1998년 경제성장 전망을 0.6%로 낮추고 금융위기와 IMF 안정화 프로그램이 기대보다 더 심각한 경기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반감되었다.

1998년 2월 IMF의 차기 평가때는 0.6%의 (경제성장전망)수치가 다시 하향조정되어 연간 3.5%의 생산 감소와 첫 이 사분기 동안의 6% 감소로 다시 하향조정되어, 완전한 경기후퇴가 인정되었다.

훨씬 더 큰 후퇴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 이 우울한 전망은 GDP 1%의 재정 흑자를 유지하는 대신 1~2%의 적자재정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IMF가 양보하도록 만들었다.

IMF 아태담당국장 허버트 나이스(Herbert Neiss)는 IMF의 양보를 설명하면서 “경제가 너무나 침체하여 지속적인 엄격한 긴축정책이 새로운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를 웃도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IMF의 주장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추안 정부는 IMF와 새로운 양해를 하는 대신 외국인 기업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들에게 비금융부문에서 더 관대한 투자특권을 허용하고 파산법을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하며 태국전화기구, 태국항공, 태국통신기관 같은 핵심 국영기업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민영화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합의에서 정부는 1998년 3월말까지 “불이행” 차관의 분류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그에 따라 자본을 재구성하도록 강제하기로 약속했다.

11월 중순 취임 이후 정부는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산가치가 통화하락으로 형편없이 떨어진 뒤 계속 IMF가 요구한 방향에 따라 자본을 재구성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것은 외국인 파트너들이 태국 기업의 꽤 큰 지분을 갖도록 허용했다는 의미이며,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긴급 법안에 의해 가능해진 조치였다.

몇몇 금융기관들에게 선택은 외국돈을 끌어들이느냐 아니면 더욱 직접적인 정부통제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였다. 실제로 정부는 구조조정, 매각 또는 해체를 위하여 거의 부도난 네 개의 은행을 국유화했다.

법적 근거가 확보되자 외국은행들은 현금이 바닥난 태국의 은행들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산와은행은 태국의 가장 큰 은행들 중 하나인 시암(Siam)상업은행의 지분 10%를 취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것으로 시암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모두 35%에 다다르게 되었다. 시티은행(Citibank)은 퍼스트방콕시티은행(First Bangkok City Bank)의 소유권 지분 50.1%를 취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약이 1998년 2월에 중단된 채로 남아있는 동안 네델란드 금융그룹인 ABN-AMRO는 아시아은행(Bank of Asia)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1998년 2월까지 추안 정부는 IMF에 매우 순응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물론 전임 차왈릿 정부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보다 더욱 그러했다.

IMF 대표인 나이스가 표현했듯이 “태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고비를 넘겼다... [태국은] 한두개의 전투는 이겼으나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

이자율 정책과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차이는 남아있지만 정부와 IMF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경제회생의 열쇠는 외국자본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신용 회복의 열쇠는 IMF의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국은 외국자본에 근거한 성장 패턴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 태국을 현재의 곤란에 빠지게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익을 얻을 전망이 몇 년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침체기에 어떻게 외국자본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만족스럽게 대답되지 않았다.

2. IMF와 인도네시아

화산밑에서

1997년 9월 세계은행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놀라운 경제적 발전이라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장 우수한 동아시아 경제국 중의 하나이다.” 놀랍게도 이 견해는 1998년 3월 까지도 세계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 떠있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인도네시아는 건전한 거시경제관리와 탈규제화 그리고 기간산업에의 심화된 투자를 통해 경제를 다원화하고 경쟁력있는 민간부문을 성장시키는데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다. 오늘날 외국투자와 국내투자가 모두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투자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제 대규모의 개발도상국 경제중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 역동성은 많은 부분 무역과 금융을 자유화하고 해외투자와 규제완화를 촉진한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나라가 지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50% 폭락하고 통화가 70% 이상 절하되었으며 그 “역동적 경제”가 43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연계된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개입주의적인 IMF 조건에 종속된 바로 그 나라다.

1997년 7월 태국의 바트화가 미달러화에 대한 고정을 포기한 직후 불안하거나 기회주의적이었던 투자자들과 통화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다팔고 채무를 회수하고 통화를 폭락시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반(fundamentals)”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지역의 통화와 경제가 붕괴하는 “전염”효과를 촉발시킨 것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다. 각국 통화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그 국가들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시장이 통화가치를 결정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통화 공격에 취약하도록 만든 약점은 태국의 그것과 비슷했다 : 증가하는 외채, 민간 부문 부채 문제, 불량한 대부 상황,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능력에 대한 불신, 팽창하는 자산 거품을 부풀리는 과도한 외국투자 그리고 강한 미달러화에 고정된 과대 평가된 통화 등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건전한 것으로 보였지만 금융부문은 몹시 의심스러웠으며 결국 가장 약한 고리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기의 초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은행 보유고를 이용하고 환율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여 통화를 방어함으로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8월 13일 태국이 IMF와의 합의에 서명하고 있을 때 루피아의 가치가 당시 사상최저치인 달러당 2,682 루피어를 기록했다. 7월 이전의 수준은 달러당 2,400 루피아였다. 8월 14일 정부는 관리환율제를 폐지하였고 루피아는 곧 2,755루피어로 떨어졌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여 통화 방어를 시도하고 정부가 39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을 예산 삭감에 맞춰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10월 6일에는 루피아가 달러당 3,845까지 떨어지는 신기록을 냈다.

이후 외환보유고의 감소, 무너지는 금융기관 그리고 자본의 국외유출에 직면한 정부는 IMF의 원조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월31일 인도네시아는 430억 달러 차관 협정에 합의했다.

이중 230억 달러는 '우선 지원자금'으로서 IMF의 100억 달러, 세계은행의 45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35억 달러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신의 국제 리저브(international reserves : 역자노트 : 이걸 IMF같은 국제기구에 예치해둔 자국의 출자금을 말하는 것같은데 잘모르겠으니 확인바람) 50억 달러로 이루어져 있다. 2차 보충적 지원자금은 총 200억 달러로서 미국의 60억 달러, 일본과 싱가포르의 각 50억 달러, 그리고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각 10억 달러 등을 포함한다.

합의된 금액은 인도네시아의 특별인출권(SDR)의 490%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특별 승인을 필요로 하는 500% 선의 바로 아래에 있는 수치다.

IMF구제 정책의 목표는 "외환시장 조건을 안정시키고 자본유입 저하에 맞서 경상수지의 체계적인 조정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빠른 성장의 재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설정된 목표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2%로의 조정, 5개월 수입분에 해당하는 공식 보유고 확보, 그리고 소비세 과세 증대와 면세혜택 제거를 통한 1%의 예산 흑자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긴축 통화정책(이자율을 올려 잉여 통화를 끌어내고 회계상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외국자본을 유인한다.), 희생가능성 없는 은행의 폐쇄, 해외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국내독점의 와해 그리고 민영화 확대이다.

구체적인 개혁으로는 화학, 해산물, 철강 등의 영역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이 WTO에 제소한 국민차 사건에서 인도네시아가 패할 경우 WTO 결정을 미리 이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주요 국책투자의 연기나 재조정 등이 있다. 수하르토 정부는 또한 수입세를 인하하고 경제의 더 많은 부문을 외국투자에 개방하며, 새롭게 설립된 민영화위원회의 관리하에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약속했다.

IMF가 예금환수소동을 야기하다

16개의 파산한 은행을 폐쇄시키는 IMF의 지침은 그러나 신뢰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전국의 은행 중 3분의 2에서 예금 환수 소동(bankrun)을 야기했으며 이로써 금융 부문은 더 악화되었고 이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잠식했다. IMF 자신도 1월 중순 뉴욕 타임즈에 실린 내부문건에서 그점을 인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비밀보고서는 IMF 구제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실패하여 아시아 많은 지역의 금융시장 몰락을 촉발하는데 기여한 은행공황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은행 폐쇄는 금융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기는 커녕 그 대신에 새로이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를 촉발했다. 인도네시아 은행의 3분의 2가 영향을 받았고 20억 달러 이상이 인출되었다."

그후 2개월 동안 IMF 구제금융은 자본 유출 방지와 루피아 폭락 억제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분명히 수하르토의 나라가 모든 면에서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시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IMF 개입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IMF도 투자자들도 차관 조건을 지키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심에 신뢰를 갖지 않고 있었으며 자카르타로부터 나오는 모순된 메시지들에서 비롯된 혼란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76세의 대통령은 어떤 때에는 주요기간산업 계획의 다수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다음 순간에 특별대우와 지속적 지원을 받는 15개의 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 사업들의 상당수가 그의 직계가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경제와 기구들이 수하르토의 자손들과 친구들로 이뤄진 내부집단에만 한정된 용자와 계약의 족벌주의적 체제에 얼마나 깊숙히 젖어 있나를 잘 보여준다.

가족재산의 추정치는 6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각양각색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

은 가족 재산 중의 하나이다. "수하르토의 6명의 자녀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항공, 은행, 석유화학 그리고 국민차 산업에서 막대한 지분을 모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회사들은 종종 일을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수하르토의 자식들을 '고문'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물러나라 수하르토'라는 커버로 나온 1월 1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수하르토는 개혁 실행보다는 개혁 약속을 더 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결국 그의 아들, 딸들에게 엄청난 부를 모아준 경제 구조를 무너뜨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의 친척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는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통화에 대한 새로운 맹공격과 또 한편의 은행돈 인출 소동,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어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12월 초 수하르토의 건강 악화 소문과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 회의 불참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자 가속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하르토 정권의 지속불가능성과 그가 창출한 정치적 진공상태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나이트 독재자가 경제적 재화를 내놓고 있는 한 아무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자 국민의 단결과 변영의 확산이라는 수사(修辭)가 곧 폭력과 혼돈으로 바뀔 수 있는 의견차이, 절망, 분노 그리고 빈곤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호황시기에 정치적 안정으로 보였던 것이 어려운 시절에는 위험한 경직성으로 보인다."

수하르토 IMF에 반발하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1월6일 예산 연설은 파괴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는 석유와 쌀, 비료 같은 주요산물에 대한 보조금의 실질적 인상과 정부지출의 32% 인상을 발표했으나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조금과 독점을 철폐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예산 수치는 4%의 성장률, 9%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달러당 4,000루피아의 환율과 같은 극도로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현재 성장전망은 -0.5%이고 1998년 2월의 소비자물가 인상은 32%이며 루피아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없이 달러당 10,000루피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량실업, 급속한 경기 위축 그리고 잠재적 사회불안 등에 비추어볼 때 수하르토의 예산은 상황에 대한 논리적 대응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IMF와 시장은 모두

이에 반대했다. 시장은 통화를 더 매도하고 더 많은 돈을 해외로 이동시킴으로써 대응했는데 이것으로 루피아는 1월9일에 결정적인 심리적 선인 10,000루피아를 넘어서 버렸다.

그때쯤 식량가격 폭등과 폭동, 식량 사재기 소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정부는 사재기 대해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식량배분을 위해서 군대를 투입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신경이 예민해진 국민들과 더욱 불안해진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조치는 결코 아니었다.

미국 열기를 돋구다

IMF는 최고위 관료들을 수하르토에게 보내 예산안을 철회하고 IMF 합의의 준수를 확인하도록 설득했다. 수하르토는 또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 호주의 하워드 수상 그리고 독일의 콜 총리 등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 모두가 예산안을 수정하고 IMF 조건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클린턴은 두명의 고위 관료,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과 재무부 차관 로렌스 서머스를 파견해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IMF는 이런 엄청난 압력을 이용하여 1998년 1월15일에 수하르토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장면은 IMF 총재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가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 수하르토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감독자의 태도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에서 강렬하게 포착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주가는 4% 더 떨어졌다. 7월에 2,400루피아가 안정되어 있던 통화는 12월초 4,000으로 떨어지는데 5개월이 걸렸고 그후 1월22일 달러당 17,000루피아가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떨어지는데는 단 한달이 걸렸다.

두 번째 IMF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게 더 압력을 행사하고, 관심사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합의는 "루피아의 엄청난 폭락은 적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통화, 금융부문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신용의 상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꽤 구체적인 거시경제적 표적을 설정한 첫 번째 합의와는 달리 새 합의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 "현재의 불안정한 조건하에서 정확한 거시경제적 표적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을 약 20%로 억제하면서 생산의 감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거시경제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경상수지흑자 달성
- 인플레이션의 20%대 유지, 균형예산집행(예전의 흑자예산요구에서 변한 것임)
- 4월1일부터 전기와 연료(케로진과 디젤은 제외)에 대한 보조금 철폐
- 여러 상품에 대한 소비세 증액, 모든 부가가치세 감면 철폐
- 가솔린에 대한 5% 세금 부과, 징세제도 개선
- 1998/99 회계년도부터 투자 및 산림녹화기금을 중앙세입에 포함하고, 산림녹화기금이 특정된 목표를 위해 분명히 쓰이도록 보장.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 모든 식료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5%로 인하하고 비농업 관세를 2003년까지 10%로 인하.
 - 1998년 6월까지 은행의 외국인 소유 허용 등 은행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 1998년 2월까지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철폐
 - 담보금융의 처분과 허약한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청산의 감독을 위한 인도네시아 은행구조조정기구의 설립
- 그러나 여기서도 "새로운 기구가 허약하지만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금융기관들, 특히 수하르토의 가족들과 연관된 기관들을 폐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회의가" 있다.

수하르토의 '가족의 가치'가 공격받다

새로운 합의가 거시경제적 표적에서 결여한 것은 미시경제적 지침에서 보충되고 있는데 그것은 수하르토의 경제적 권력의 핵심을 타격하고 있다. 그것은 수하르토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던 카르텔, 독점 그리고 세금들의 해체를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12개의 대형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중에는 수하르토의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있다. 국민차 사업(수하르토의 막내아들인 토미가 운영)과 비행기 사업(수하르토의 "골든 보이(golden boy)"이자 새로 임명된 부통령 하비비(Habibie)가 운영)에 대한 특혜도 모두 중단되었다.

IMF는 또한 캐슈, 정향, 오렌지, 바닐라 같은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2월1일까지 야자 기름산업에 대한 외국투자제한의 철폐, 1998년 3월까지 도/소매 거래에 대한 규제 철폐 그리고 1998년 6월까지 (수하르토의 아들 토미가 운영하는) 정향판매위원회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결으로 보기에 사소한 이 조건에 대해서조차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 2월말 한 장관은 "정향판매위원회는 다른 방식으로 존속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언급을 했다. 정향가루는 그 지역 담배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정향사업은 매우 이익이 큰 사업이다.

IMF는 공식·비공식 카르텔, 독점 그리고 (합판, 종이, 시멘트 같은 상품에서의) 판매협약의 철폐를 요구했다. 판매협약이란 중앙판매기관을 통해서 팔도록 하거나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생산쿼타 혹은 시장점유율을 배당받는 제도를 말한다.

IMF는 국가의 쌀 유통기관의 독점을 제한했다. 밀가루는 첫 번째 합의에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제외되어서 수하르토의 친구인 리엠 리옹(세계최대의 즉석국수제조업자)의 밀가루가격에 대한 통제력을 위협했다고 한다. 설탕 수입 규제는 제거될 것이고 농부들은 사탕수수를 심을 의무가 없어진다. 이로써 현재 설탕 농장은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이 증대되어 9년교육과 더 나은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IMF와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27일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회사 부채 이자상환의 일시적 동결을 발표했다. 그와 함께 회생불가능한 은행의 폐쇄와 자산 매각을 포함하는 은행 개혁을 감독할 새 정부기구 설립계획도 발표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은 몹시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 1997년 3월 폭력적인 폭동과 화교에 대한 약탈이 발생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자본 유출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돈을 더 안전한 천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보내도록 만들었다.

자본 유출은 너무나 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인도네시아의 지불능력 자체가 위협받았다. 외국은행들은 인도네시아 은행들과의 은행간 연계를 끊고 신용장을 거부하여 수입업자들이 해외로부터 원자재와 다른 원료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루피아의 폭락은 수입품의 가격이 두배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공급이 감소하며 사람들은 통화를 퇴장시키고 병원이 규모를 줄여야 하며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됨을 의미했다.

IMF 조건은 콩, 설탕, 밀가루 같은 기본곡식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함으로써 이미 상승하고 있는 식량 가격을 더욱 채찍질했다. 물가는 연료와 전기에 대한 국가 보조가 종료되는 4월1일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년 12월말에 1,400억 달러(GDP의 3분의2)로 추정된 거대한 외채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 중 200억 달러는 단기외채이며 650억 달러는 민간 비금융권의 부채이다. 이것은 재화와 용역 수출의 3분의 1이라는 이자비율을 의

미한다.

통화위원회 게임

외국통화를 끌어들이려는 필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수하르트 대통령은 2월 중순경 통화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의 주요 골자는 통용되는 국내 통화의 모든 단위가 고정환율(루피아의 환율로는 5,000-5,500이 논의되었다.)의 외화보유고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는 다시 IMF와 충돌하였고 IMF는 인도네시아가 그 계획을 시행할 경우 4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완강한 노력 속에서 수하르트는 끝까지 버텼다. 심지어 통화위원회안을 지지하지 않은 중앙은행장을 해임하기까지 했다. 통화위원회에 대한 토론은 계속될 것 같다. 3월11일 자카르타에는 위원회가 이틀내로 설립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부는 빠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그 해답이 통화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싱가포르의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의 한 인도네시아 분석가가 말했다.

수하르트가 통화위원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로 통화위원회가 하루나 이틀만 기능한다고 해도 수하르트 집단은 그들의 외채를 10,000루피아가 아니라 5,500루피아에 깎아낼 수 있다.

둘째로 그것은 올해초 IMF에게 굴욕적으로 목종해야했던 수하르트에게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통화위원회에 대한 말이 나오자 외국통화를 빨아들이는 효과를 낳았다. 루피아가 낮은 수준에서 다시 고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찍 들어가놓으려는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IMF의 원조를 마지못해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로 받아왔다. 분명히 수하르트는 지켜야할 기득권이 있고 그것이 IMF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신용을 회복하려는 노력속에서 숨어내려는 바로 그 이익이다.

IMF와 대통령사이에 벌어진 껄스민 권력투쟁속에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3월초 미국대통령 클린턴은 전직 부통령 윌터 먼데일을 보내 수하르트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했다. 반면 수하르트는 통화위원회계획을 밀어붙이고 뻔뻔하게 7번째 대통령직에 취임한데다가 심지어 예산낭비자로 알려진 하비비를 부통령으로 임명하여 서구와의 적대를 유지했다. 이 모든 교만함과 요지부동의 와중에 2억 인도네시아인들만 고통받고 있다.

그 충격은 파괴적이었다. 1997년말까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에 대한 통계는 250

만에서 660만까지 여러 가지이다. 특히 건설산업이 와해되어 적어도 95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직되었다. 실업률은 7.7%에서 10%로 뛰었고 1998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말까지 환율폭락과 자본유출은 금융부문을 폐허로 만들어 물가의 상승과 기업의 몰락을 야기했다. 정부가 IMF 개혁의 이행에 극장을 부렸기 때문에 그 개혁이 현재의 상황이나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정치·경제적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정치적 우려가 경제적 위기를 압도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IMF와 한국

호랑이에게 한 수 가르치기

1996년 9월30일 '세계에서 가장 활기있는 경제의 하나라는 축복을받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세계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는 엘리트적 '부자들의 클럽'에 합류했다.

한국 발전의 배후에 있는 통계수치는 인상적이다. 1965년에 필리핀보다 낮은 일인당 GDP를 기록했던 한국은 1995년에 필리핀이 2,745 달러일 때 13,269 달러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과시했다. 이것은 단 30년동안 770% 증가한 것이다. 동일한 기간동안 연간경제성장률은 평균 7%를 웃돌았고 위기이전의 수치로 보면 한국은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였다.

1996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는 한국을 "공적개발원조(ODA)에 상당한 공헌을 할 잠재력을 가진 '떠오르는 공여국'의 훌륭한 예"라고 묘사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1945년 독립이후 한국은 총 48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으며 "원조 종속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한 국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후 1년만에 한국은 지난 40년간 받은 총 공적개발원조의 열배가 넘는 액수인 570억 달러를 IMF로부터 제공받는 구제금융에 합의하여 사실상 수혜국이 되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OECD회원가입은 외국금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더 싸고 질 좋은 수입품으로 국내생산품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금융위기에 기여한 금융 및 여타분야의 탈규제를 강요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고전적인 "신흥공업국(NIC)"인 한국은 부분적으로 1950년대 초 토지개혁과 같은 자산중대 개혁을 통해 수행된 국내저축 동원에 주로 근거한 산업발전의 길을 닦아왔다. 외국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엄격한 과세제도 그리고 보호받는 국내시장과 공격적인 중상주의적 전략을 통해 개방시킨 해외시장에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을 통해 추출된 국내금융자원이 자본축적의 주요 원천을 구성했다.

고속 산업화의 제도적 틀은 사적부문과 지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였다. 우선적 전략 부문과 산업을 선정하고 관치금융을 통해 거기에 자금을 (때로는 마이너스 이자율로) 제공하고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국가는 산업집단인 재벌을 키웠다. 국가는 후에 이들을 국제시장으로 보냈다. 이 전략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단히 성공적었고 한국의 "기적적인" 산업화와 수출중대의 밑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초 정부의 소망에 잘 따라주는 상업적 은행들이 현대, 삼성, LG 그리고 다른 재벌들에게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에서 시장점유율을 개척하도록 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재벌 연합은 국제시장에서 멈출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좋은 시절은 1985년부터 90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수익성은 한국이 국제수지에서 달성한 흑자에서 대강 알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은행-재벌 연계의 부패가 증가해가면서 그때까지 매우 성공적이던 국가주도 전략의 비효율성과 자만심이 1980년대 초에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경제학자 또는 정부관료 -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국제적 지지자들도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진퇴양난

90년대초 상황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특히 세가지 요소가 중심적인 듯하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R&D)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둘째는 미국에 의한 엄청난 통상압력이었다. 세 번째는 OECD 가입인데 그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외국자본과 금융에 대해 더욱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부의 시장실패 방지에 대한 무능을 폭로했다. 사실 시장실패의 의식적인 방지는 지난 "기적"의 기간동안 한국 성공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던 것이었다.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더 세련된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R&D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 한국의 재벌들은 부동산 매입이나 주식투자같이 쉽고 빠른 길을 택해 이익을 얻었다. 1980년대에는 재벌자금의 165억 달러 이상이 부동산 투기와 고급 호텔, 골프

장 건설에 이용되었고 1996년에 총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25%에 다다랐다.

공장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기계는 계속 일본에서 수입되었고 컬러TV에서 랩탑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조립생산하는 상품들은 주로 일제 부품들로 제작되었다. 모든 의지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기술을 이용해 일본부품을 노동집약적으로 조립하는 장소라는 지위를 졸업하지 못했다. 예상가능했듯이 그 결과는 일본에 대한 커다란 무역 적자로서 1996년에는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었다. 미국은 항상 적자를 기록하는 상대인 일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을 일본에 대해서보다 더 가혹한 전면적 통상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마도 한국은 보복능력이 없어서 더 그러했을 것이다. 이 공세에는 플라자 협약 스타일의 원화 평가절상 강요도 포함되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은 1987년의 96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가 1992년에 1억5천9백만 달러의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1996년에 대미 무역적자는 10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총 무역수지 적자는 2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값싼 노동력을 갖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경쟁이 한국을 압박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과대팽창, 과대전문화와 결합하여 1996년까지 한국의 상위20개 기업들이 자산에서는 겨우 3%의 이익을 얻는 반면 평균 대출비용은 8.2%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산에 대한 부채의 평균 비율은 220%였고 (많은 경우에는 300-400%까지) 자산 이득은 겨우 0.8%였다. 많은 회사들이 부채상환을 중단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필사적 조치

수익성을 회복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경영자들은 1996년 겨울에 "과잉 노동력"을 해고하고 남은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미국식의 개혁 노선을 따라 해고 및 인원 감축에 관한 훨씬 확장된 권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법안을 의회에서 억지로 통과시키려 했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성난 거리시위로 무산되자 많은 재벌들은 정부와 은행과의 오랜 공존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그들의 채산성없는 사업을 살려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OECD가입 요구조건에 대한 순응과 세계화의 압력에 수반된 규제 완화는 갚을 수 없는 대출금을 만기연장하여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은행과 민간부문에 의한 대

규모 단기 해외 차입으로 이어졌다.

국가 통제의 포기는 또한 많은 재벌에 의한 몇몇 산업에의 과잉투자도 낳았다. 이 문제는 재벌들이 초국적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자율성 증가와 투명성 부족에 의해 악화되었다.

국내 은행 제도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생산적이고 안전한 대출로 내보내어 그 충격을 완화하거나 최적활용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잉 유동성은 위험하고 투기적인 투자로 흘러들어갔다. UNCTAD의 일마즈 아키유즈(Yilmaz Akyüz)에 따르면 문제는 은행제도의 통제나 감독이 아니라 자본 유입을 제한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그 충격을 통제할 수단의 부재였다. 그가 지적하듯이 "이 수단은 보통 '금융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자유화의 채택으로 폐기되어버린다."

1997년 10월 한국기업들의 이행불능 채무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되었다. 이것이 표면화하자 이미 한국에 2천억 달러어치의 투자와 대부를 한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새로운 자금의 제공을 꺼리게 되었다. 1997년 11월말 총 외채 1200억 달러 중 660억 달러를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한국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처럼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줄에 섰다.

미국에서 서울로 직접

IMF는 지체없이 한국의 지원요청에 응답했다. 경제전문가 팀이 "경제적 건강과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멕시코 스타일의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신속하게 파견되었다. 중요한 선례가 마련된 것이다. 즉 보통 개도국들을 위해 마련된 엄한 IMF 조건에 처음으로 선진 공업국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오타와 대학의 미셸 초수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에 따르면 구제금융의 조건들은 파견된 팀이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미 재무성, 미상공회의소,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그리고 주요 유럽은행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고 한다. 한 정통한 한국소식통에 따르면 미상공회의소는 실제로 최종합의의 상당한 부분을 직접 집필하기까지 했다.

IMF파견단은 1997년 12월3일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일주일만에 그들은 대기 차관으로 570억 달러를 모았다. IMF가 210억 달러,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이 40억 달러를 냈고 일본의 100억 달러와 미국의 50억 달러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총 200억 달러도 있다.

사상 처음으로 몇 개의 유럽국가들이 위기에 빠진 이 아시아 국가에게 대출을 약속했다. 이것은 위기의 세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1 참조). 그 대가로 한국정

부는 숨을 헐떡이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 제도, 노동, 산업의 긴 개혁 리스트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었다. 주식시장과 통화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고 한국의 재무장관은 두 번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다. 신문들은 IMF 협상팀이 악명높을 정도로 거친 협상가들이 있는 선진 경제국을 다루는 일에 몹시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또한 시간지연에 대해서도 비난받았는데 분명히 그들의 상관인 미셸 캉드쉬(Michel Camdessus)에게 승인받지 않은 조건들에 합의하느라고 그런 것이었다. 캉드쉬는 또 IMF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엄격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강경한 지시를 받고 있는 터였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감소하고 있었고 정부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IMF합의안에는 무엇이 있나

IMF는 구제금융이 수혜국 IMF쿼타의 다섯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하여 새로운 종류의 차관인 '보충적 리저브 제도(Supplemental Reserve Facility)'를 신속하게 발명했다. 한국 "구제금융"에 대한 210억 달러 출자는 1995년초 당시 최고 액수이던 멕시코에 대한 178억 달러보다 많고 한국 쿼타의 20배가 넘는 액수이다.

합의는 한국이 총 1200억 달러 외채중 단기 660억 달러에 대한 지급불능을 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미 한국에 234억 달러를 대출했고 자기자신의 불안정한 은행제도 상황 때문에 지급불능을 감당할 처지가 아니던 일본은행의 이사회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유럽대부자들도 한국 상황에 노출되어있었다.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에 대한 독일의 총 대출금은 미국의 그것보다 많았다.

모든 IMF합의처럼 세부사항은 피상적이지만 출판된 정보에 따르면 재정과 통화 긴축이라는 전통적 IMF 공식에 외국은행과 기업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개끄덕임이 흥미롭게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개혁, 미국 은행과 펀드매니저에 대한 금융부문 개방 확대, 일본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그리고 한국기업의 외국인 과반수소유를 위한 길 닦기 등이 그것이다.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IMF 문서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의 목표는 "1998년과 1999년에 경상수지적자를 GDP의 1% 이내로 줄이기, 인플레이션을 5%나 그이하로 유지하기, 그리고 - 신용도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 1998년에 실질성장 감소를 3%로 제

한하고 1999년에는 잠재적 성장률을 향해 회복하기"이다. [표1 참조]

표 1 : IMF차관에 대한 대략적 출자금 (미화 십억달러 단위)

출자국가 또는 기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IMF	10	4	21
아시아개발은행	3.5	1.2	4
세계은행	4.5	1.5	10
호주	1	1	1
캐나다			1.25
프랑스			1.25
독일			1.25
영국			1.25
이태리			
일본	5	4	10
싱가포르	5	1	
미국	6		5
한국		.5	
인도네시아	5	.5	
브루나이		.5	
홍콩		1	
말레이시아	1	1	
중국		1	
합계	41	17.2	57

*IMF차관의 총합계에 대한 수치는 자료마다 다르며 각국의 정확한 출자액은 쉽게 구할 수 없었다.

합의의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화긴축정책
- 유동성의 고평을 당기기 위한 이자율의 12.5%에서 21%로의 인상 (12월에 이자율은 32%까지 올랐다.)
- 인플레이션을 5%나 그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통화공급 통제
- 유동하는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 균형예산 혹은 약간의 흑자예산 운영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이자비용 포함)
- 부가가치세 인상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확대

이러한 재정 및 통화 정책외에도 합의안은 긴 제도개혁의 목록을 담고 있다. 중앙은

행의 독립(정부와 재벌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단절하기), 부실금융기관 폐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부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를 포함하는 금융부문 개방 가속화 등등.

다른 핵심 구조 개혁으로는 무역자유화, 자본이동자유화, 기업 관리와 구조의 감독 그리고 노동시장개혁이 있다.

최초의 합의 이후 한달도 안된 3주동안 IMF 프로그램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못하고 정부는 163억 달러의 단기차관을 막지 못할 것 (당시 외환보유고는 겨우 100억 달러)이라는 우려에 의해 촉발된 시장과 환율의 소용돌이가 몰아치자 한국은 지급불능을 막기위해 긴급투입된 100억 달러를 받았다.

비평가들은 IMF가 너무 늦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특히 미국이 첫 번째 현금지분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IMF와 미국에 의해 그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자 첫 번째 현금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급되었다.

= 정부가 다음과 같이 경제개혁을 가속화시킨다는 조건하에서 :

- 병든 은행을 문닫고 위험자산을 줄여 외국인수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 1997년 말까지 채권시장 개방하기
- 이자율 자율화하기
- 자동차 등 핵심 일본 상품에 대해 1999년 중순까지 국내시장 개방하기
- 외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예정보다 앞서 지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기

채권자들은 크리스마스계절의 선의를 나누기는커녕 기진맥진한 한국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하여 (심지어 경제위기와 무관한 것까지) 자신들의 근육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IMF의 한국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매우 강경했고 신속했으며 모든 방향으로 부터 나왔다. 합의가 타결되기도 전에 9월27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와 IMF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민간부문의 금융위기가 지 IMF가 전통적으로 달려들던 정부 지급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낮 으며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균형예산의 경력까지 있다. 엄격한 재정긴축은 민간 부문 조정의 충격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은행 구제 자금을 빌릴 능력이 있다.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을 주장하는 것에는 잘못된 과잉정책의 기미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IMF가 처방한 것이었다 : 재정 긴축, 세금 인상, 지출 삭감, 통

화긴축 그리고 더 많은 금융자유화.

하버드 대학 국제개발연구소의 제프리 삭스 소장은 IMF를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IMF의 비밀주의를 비난했다. "IMF는 합의안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이해할 시간도 없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합의를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과 소망하던 결과인 "1998년에 실질성장 감소를 3%로 제한하고 1999년에는 잠재적 성장률을 향해 회복하기" 사이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삭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원화는 지난 12개월동안 달러당 840원에서 어제(1997년 12월10일) 최저치인 1,565원 까지 약 80%가량 폭락했다. 이 평가절하는 교역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한국이 본질적으로 불변인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의 거대한 절하에 직면하여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통화긴축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IMF가 명령한 것이다. 단기 이자율은 합의 서명시에 12.5%에서 21%로 뛰어올랐고 그 이후로 더 상승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연쇄반응을 통해 빠른 경기위축으로 이어졌다 :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대출이 비싸지자 회사들은 그 대출금을 받을 형편이 되지못해 망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소비자 수요가 위축된다.

게다가 곤란에 빠진 금융기관들은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서비스를 중단하고 기존 융자의 만기연장을 거부하여 보유자금을 늘리려고 했다.

국내기업들(이익을 보던 회사들까지도)이 대출을 할 수 없게되고 해외 채권자들이 지급불능과 전망과 빠른 경기위축에 직면하게 되자 발생한 공포는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사실상 IMF의 노력은 불길을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합의 서명이후의 며칠동안 심지어 그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원화는 더 폭락했다.

제프리 삭스는 IMF의 반응이 "몇개월 전만해도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하던" 경제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과잉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가 일본, 미국, 유럽이 한국은행에 대출을 하고 단기부채를 연장해주도록 촉구하는 물밑 접근방식을 쓸 수도 있었다고 암시했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외화가 사실상 바닥났을 때 외환보유고를 엄청나게 과장하는 등 정보공개에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재벌 박살내기

IMF구제안의 분명한 목표중 하나는 재벌 - 대우, 현대, 삼성 같은 낮은 이익으로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세계진출을 이끈 거대한 족벌경영 기업집단 -을 해체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팽창정책의 결과로 재벌또한 한국의 막대한 외채에 책임이 있다. 대중과 노동자에게 인기가 없지만 재벌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그 부작용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량해고와 생산성 하락일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엄청난 반정부적 반발을 야기했다. (이른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입법에 대한 1996년의 긴 투쟁을 상기해볼 때 이 특정한 조항이 예전에 국회에서는 포기된 인기없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부와 재벌의 합의에 따라 그리고 한국기업의 취득을 외국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노총(KCTU) 국제연대 담당자는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IMF 조치의 예봉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에 책임있는 정부관료들이나 기업가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재벌관계자들도 그 나름대로 IMF의 거만한 태도에 분개하면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IMF를 이용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음모가 감지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선출되기 바로 며칠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경제주권을 포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압력에 굴복하여 자본시장을 열고 은행과 다른 건전한 기업들을 외국인수합병에 무기력하게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당시 김대중은 당선될 경우 IMF와의 재협상을 약속했다. 5일후 IMF가 모든 대통령 후보들에게 IMF 합의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모두가 동의했지만 김대중씨만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추가적 재협상을 조건으로" 합의를 지지했다.

김대중은 1998년 2월25일까지 공식적으로 취임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그의 팀은 선거 이후 IMF와의 협상을 담당했다. 그가 IMF합의를 잘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 반면 그의 애초의 조심스러움은 은행을 거덜내고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을 야기한 정부와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에 대한 분노에 근거한 강력한 대중적 반응을 반영한 것이었다. 경제적 주권이 너무나 손쉽게 IMF와 미국에 넘어가고 결국 위기의 부담은 노동자가 져야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마틴 울프(Martin Wolf)는 1997년 12월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문제는 IMF 프로그램이 한국정부가 단기외채를 막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뿐만이 아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하는가도 문제이다. 서구의 채권자들이 재벌에 대출을 해주고 나서 갑자기 재벌에게 빚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은행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나서 분명히 갑자기 그 은행들이 정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말 뉴욕시에서 일군의 채권은행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후 그러나 민간부문의 채무자들이 지급불능에 빠질 때에 대비해 한국정부가 240억 달러에 대한 보증까지 서게된 후에야 한국의 단기외채가 중기 외채로 재구성되었다.

더욱이 이 정부보증에도 불구하고 LIBOR국제대출이자율이 5.6%인데반해 채무 재구성의 이자율 조건은 7~9%로서 평균 약 2.5%나 차이가 난다.

해외투자자들을 스스로의 잘못된 투자결정의 결과로부터 구제해준 구제금융이 그런 행동을 부추길뿐이라는 (도덕적 해이라고도 부르는) 우려가 한국에서 확실히 입증되었다. 지급불능 직전에서 구제된 투자자들은 다시 그 나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1월 한달에만 5억 달러 이상이 주식과 채권으로 들어왔다. 투자자들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효과적으로 재벌을 해체시켰으며 오랫동안 소망해오던 급격한 시장과 투자 개방을 얻어내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회복일뿐이며 금융자유화의 확대는 한국의 경제를 예전의 국내저축에 대한 의존 대신에 외국자본, 특히 포트폴리오와 다른 단기자본에 대한 새로운 중독에 빠져드는 경제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안에 태국의 경우와 유사한 또다른 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는 이미 한국과 외국의 몇몇 논평가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4. 위기의 사회적 충격

이 사례 연구가 원용한 정보의 많은 부분이 현단계에서는 일화적이고 추론적이긴 하지만 경제적 위기와 IMF의 압력으로 채택된 조치의 사회적 충격은 세나라에서 모두 명백하다. 많은 논평가들은 실업을 증가와 빈곤이라는 위기의 주요 충격이 한국과

태국에서는 1998년 말이나 되어야 느껴질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언제 추락할 것인지를 예측하려는 관찰자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전이 라도 나타나려면 최소한 몇 년간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지나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원래의 위기와 그에 대한 IMF식의 대응이 가져온 사회적 충격들을 각각 분해해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자율 인상, 세금인상 그리고 공공지출삭감 같은 IMF 지침이 태국과 한국에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수하르트 정부가 1997년 10월과 1998년 1월의 두 합의에서 IMF에게 약속한 사항들의 많은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IMF가 승인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효과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비공식적이거나 임시적인 노동자들이 매우 많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미있는 통계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특히 이 집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미숙련노동자들인데다 종종 땅도 없고 대안적인 일자리를 구할 자원이나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과 공식부문의 취업률을 볼 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와 경기후퇴의 즉각적인 충격과 IMF가 처방한 구조개혁의 장기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A/ 태 국

1960년대말 태국인구의 57%가 빈곤선이하에서 살았다. 위기이전에 그 수치는 13%까지 내려갔었다. 그 사이의 기간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이 있었음에도 약 800만명의 태국인들이 여전히 하루에 2 달러도 벌지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기상승의 혜택을 받지못했으며 이제 위기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에 속하게 될 것이다.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빠른 성장감소, 수입가격 상승, 높은 대출 비용, 기업 도산 그리고 정부지출 삭감의 영향을 받았다.

대략적으로 1997년말 실업자 수는 140만명이었고 1998년 상반기에 2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분석에 따르면 실제 1997년말 실업자 수가 전체 경제인구 2900만명 중 290만명이었다고 한다. 피해자 명단의 제일 윗줄에는 IMF의 측구에 따라 정부가 폐쇄시킨 58개 금융기관의 직원 만오천여명이 있다. 분석가들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이후 최고 20만명의 금융기관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

태국 노동부의 관계자는 방콕의 랑싯(Rangsit) 대학에서 열린 최근의 어떤 세미나에서 6만2천명이 경제 위기의 직접적 결과로 직업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업들이 사회복지부에 제출한 해고노동자들의 수에 관한 월별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비공식부문에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을 것이다.

거품경제의 붕괴에서 나오는 결과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실물경제를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7년 후반기에 방콕의 거의 모든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를 반쯤 지어진 건축구조물로 추하게 만들고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위축되는 경제에 내뱉어놓았다. 12월까지 태국의 6만여 농촌마을로 각각 평균 5명의 도시이주 노동자들이 되돌아왔다고 한 비정부기구(NGO)가 추산했다.

농촌경제로의 대이동은 무엇보다도 방콕에서 버스로 세시간 정도 떨어진 피치(Pichit)지역에 사는 한 사회연구가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는 상당한 수의 건설노동자들이 농촌인력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놀랍게도 나는 방콕의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방출된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사기를 잃었으며 굶주리고 있었다.”

태국 북부의 난(Nan)이라는 지역의 실직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그 연구가는 “면접한 사람의 약 80%가 경제위기 때문에 [1997년] 12월 이후에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조사는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북동쪽의 삼푸판 지역에서는 260명의 주민중 타지에서 일하는 110명 가운데 1998년 1월까지 40명이 돌아왔다고 세계은행조사팀이 밝혔다.

1997년 9월 당시 재무장관 타농 비다야는 약 100만명의 태국인들이 다가올 경기후퇴에서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과소평가인데 태국의 경제활동인구 2900만명 중에서 290만명이 1997년말까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정부수치에 따르면 1997년 중반 이후 8만여명이 해고되었으며 노동전문가 니콤 찬드라비툼(Nikhom Chandravithum)박사는 이 수치가 금융위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된 200만명과 합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위축의 폭발성은 1998년 1월21일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작은 폭동에서 예견되었다. 시위자들은 통행량이 많은 방나트랏(Bangna-trat) 고속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약속해오던 보너스를 주지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발표에 항의했다. 그

보너스는 노동자들의 가계수지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몇시간 동안 노동자들과 경찰, 성년 자동차 운전자들이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결국 54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어 포로마냥 경찰차에 실려갔다. 태국사람들과 국제사회에게는 그 사건의 TV방송 장면이 태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생각나게 했으며 다가올 사태의 전조를 느끼게 해주었다.

예전에 150만명까지 고용했던 건설부문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건설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근거로하던 다른 산업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1998년 1월 태국정부는 대부분 미얀마 출신인 60여만명의 저임금 어업, 농업, 건설 노동자들을 귀국시켜 도시산업부문에서 버려진 태국노동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은 1998년 1월로서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증은 갱신되지 않는다.

2월에 극적으로 (그리고 CNN카메라 앞에서) 태국군대가 100여명의 미얀마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칸차나부리에서 미얀마 국경까지 3시간 동안 걸어가게 했다. 정부가 이민노동자들을 귀국시킬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태국노동자들이 그런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같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는 문제로 남아있다. 미얀마를 정치적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과 빈곤을 피해 온 사람들사이에 경계가 흐리다. 어떤 사람들은 난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데 그들 모두가 미얀마에서의 삶을 참을 수 없다고 여긴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노동자의 수에 관한 믿음만한 자료는 없다. 이민 불법노동자들이 있는데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은 계절적이어서 건기에는 일을 찾아 도시들을 전전하기 때문이다.

경기상승기에 600만명 이상의 농촌인력이 방콕으로 이주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귀향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소득원을 하나 잃을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사람이 하나더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더 행복하다고 하며 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여전히 생활 수단이 있는 것이다.

사실 태국 정책결정자들은 이제 농촌 경제가 되살아나 태국을 경제위기로부터 구하고 실직자들을 흡수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록 농업이 태국수출의 20%미만에 불과하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부문에 고용되어있다. 그러나 출라롱코른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노동전문가인 보라비디 차로엔러트(Voravidh Charoenlert)가 논평하듯이 :

“과거처럼 태국농촌은 산업위축에서 비롯하는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동일한 자원을 나눠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태국농산물이 평가절하 덕에 더욱 경쟁력있게 되었지만 개선된 경상수지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감소때문이었다.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가 농업부문을 둔화시키고 있다. 농업은 아직도 수입원재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쌀의 수출량은 엘니노와 관련된 가뭄으로 쌀이 부족해진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에 근래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하게도 쌀에 대한 높은 세계수요는 태국의 쌀값을 인상시켜 특히 식료품 가격이 원래 비싼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산삭감의 깊은 상처

IMF의 흑자예산에 대한 주장 (후에 1-2%의 적자로 수정되긴 했지만)은 보건, 교육, 농업, 산업 그리고 노동과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공공 지출을 감축시켰다. 이 분야들은 특히 경기후퇴, 사회적 혼란 그리고 실업률 증가의 시기에 핵심적인 정부 활동이다.

1998년 초에 어린이 발전 재단이 부모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계절적 노동자들인 5개 농촌 지방 중등학교 학비보조 수혜자 143명을 조사했다. 대부분은 땅이 없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그 노동자들은 한달에 1,000~3,000바트를 집으로 보내 가족 비용, 의복, 교육, 농업 재료 그리고 의료비를 대고 있었다.

그 조사는 143명의 학생중에서 10명은 해고된 식구가 있고 11명은 소득이 감소된 식구가 있으며 19명은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식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에 대한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버스비가 3바트에서 6바트로 올랐고 국수한 그릇이 5바트에서 7바트로 올라 최소일일 생활비를 8에서 13바트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가족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줄어들었다. 동시에 IMF가 부과한 긴축예산 정책의 일환으로 우유와 학교급식 보조금은 40-50%가량 삭감되었다.

영구적으로 방콕의 슬럼가에 정착한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가족들은 돌아갈 땅도 없고 농촌 생활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일시적이거나 깨져있었다. 사례 보고에 따르면 약물사용과 약물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암페타민(중추신경각성제)을 팔러나서자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데서 입증된다. 또한 더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섹스산업에 뛰어들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은 수천개의 가구가 생활수단을 잃거나 대폭 감소된 소득을 벌고 식료품, 연료 그리고 기본 서비스의 가격인상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쌀 부족으로 쌀의 수출가격이 인상되고 국내가격에 연쇄효과가 나타나 쌀값이 7킬로당 25바트에서 50바트로 두배나 뛰었다.

태국 농가의 대다수는 쌀의 순수매자이다. 따라서 땅이 있는 농가조차도 가격인상의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지난번 우기(雨期)가 매우 빈약해서 주요 관개 댐에는 3분의 1밖에 물이 없고 전반적인 쌀 생산을 줄어둘게 했다.

농가들이 스스로의 생산량을 다 소비하고 내년 수확까지 버티기 위해 비싼 쌀을 사 먹어야 하는 1998년 9월, 10월이 되면 그제서야 경제위기와 가뭄의 본격적인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따르면 쌀값 인상10%마다 빈곤이 1%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 추산에 따르면 절대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업률 증가, 임금하락 그리고 정부보조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쌀값 요소만으로 적어도 5%가량 증가하게 된다.

고통을 완화하려는 세계은행

IMF 합의 서명 5개월 후 세계은행은 태국으로 조사팀을 보내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조사하고 세계은행이 개입할 영역을 확인하고자했다. 세계은행은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위기의 사회적 효과에 대처할 계획이다. 3억 달러의 이 기금의 일부는 정부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지역단위들로 정부저축은행을 통해 지급될 것이다.

7-8%의 이자율이 붙은 이 차관은 기간시설, 보건, 환경, 교육과 같은 기존 정부프로그램이나 지역단위, 지방정부가 관계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데 쓰일 것이다. 지역공동체들은 정부가 상환책임을 진 보조금의 형태로 투자기금을 받게된다. [표2 참조]

사회투자기금의 아이러니는 그것이 IMF 조건에 의해 강요된 냉혹한 예산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태국 지방정부는 부패와 기득권으로 얼룩져있어서 기금을 지역에 직접 지불하는 것은 과거의 개발 불균형의 일부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의 농민 대중조직인 가난한자들의 포럼은 IMF의 긴축정책과 개인 부채의 사회화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그들도 경제위기를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패턴을 늦추고 도농의 격차를 줄이며 농촌의 삶과 연계된 전통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표 2 : 태국 국가예산, 1998년 1월-12월, 백만바트 단위

프로그램	계획된 예산	실제 예산	삭감 %
중앙자금	82,051.6	76,590.0	-6.7
수상	7,993.7	6,588.3	-17.6
국방	105,238.4	80,998.6	-23.0
재정	44,797.9	42,753.0	-4.6
외무	4,131.9	3,503.2	-15.2
농업	80,864.7	62,580.5	-22.6
교통	102,108.1	67,786.4	-33.6
통상	4,364.6	3,746.8	-14.2
내무	178,540.3	132,710.2	-25.7
노동&복지	11,155.2	9,437.2	-15.4
법무	5,962.5	5,269.1	-11.6
과학기술	16,595.7	10,945.6	-34.0
교육	166,308.9	148,577.2	-10.7
보건	70,145.5	59,920.9	-14.6
산업	5,461.7	4,057.3	-25.7
대학	39,337.4	32,900.9	-16.4
기타	5,035.5	4,686.3	-6.9
정부기업	29,660.6	26,932.5	-9.2
회전자금	22,246.0	20,016.0	-10.0
합계	982,000.0	800,000.0	-18.5

출처 : 타이 포스트, 1997년 11월26일

그러나 포럼의 3개월간의 정부청사에서의 농성의 결과로 작년에 차발릿 정부가 했던 약속이 예산 긴축 때문에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는 천만 에이커의 땅을 (수출 농업에 대비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확보하고 토지, 훈련, 기타 투입요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국가농업프로그램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것은 800만명까지를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 되었는데 이는 현재 하루에 1-2 달러를 버는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의 수와 비슷하다. 농촌지방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20여년 이상의 급박한 산업화의 피해를 바로잡을 긴급한 필요가 있긴 하지만 예산감축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것 같다.

B/ 인도네시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세 국가중에서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정, 빈곤증가, 사회적 불안, 정부 무기력을 낳으며 서로를

강화시키는 정치와 경제의 위기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위기의 사회적 충격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으며 예전에 비교적 안정적이던 경제에 가리워졌던 사회적 긴장을 드러내주었다.

인도네시아의 실업과 해고 관련 통계는 각양각색이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한 뉴스보고는 위기발생이후 66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시사한 반면 정부의 공식 통계는 250만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한 노동권리 단체에 따르면 1997년 7월에서 1998년 2월 사이에 400만명이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 수치들은 잃게된 직장에 대한 것이며 위기가 시작할 때 이미 실직중이던 사람이나 매년 경제활동인구로 들어오는 250만명의 신규 유입자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1998년 초에 인도네시아 이슬람지식인 연합(ICMI)은 전체 실업률을 1200만명으로 잡았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근무 수당 동결로 1997년 4월 이후 변하지 않은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일당 5,700루피아로 살아야 한다고 불평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하만 받은채 놓고있는 공장에서 집으로 되돌려보내졌다.

현재의 환율로 최저일당은 약 63 센트이다. 달러로 볼 때 이것은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노동력이 싼 나라로 만들지만 금융부문의 유동성 위기와 지속되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때문에 수출품은 억제되고 있다.

쌀, 식용유, 설탕같은 생필품의 가격은 20-100% 가량 상승했으며 정부가 1998년 4월 1일에 연료 보조금 중단이라는 IMF의 조치를 따를 경우 가솔린 가격은 25% 상승할 것이다. 연료가격 인상은 식료품 가격에 즉각적인 연쇄 효과를 미쳐 사회 불안 심화의 우려를 낳을 것이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000 달러에서 230 달러로 떨어진 반면 1998년 2월 전년대비 인플레이션은 IMF가 처방한 20%를 훨씬 웃도는 32%로 추정되었다. 2월 한달의 인플레이션은 12.7%였고 1998년 경제는 2-3%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위기 이전에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1970년의 60%에서 1996년의 11%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통계를 더 잘나오게 하려고 빈곤선이 낮춰졌다고 말한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 과정은 역전되었다. 지역 전문가들은 최근에 빈곤 수치를 재평가해서 30-40%의 인구가 1998년말까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에 세계은행과 IMF가 발전 성공의 모범이라고 칭송하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빈곤한 사람이 식량 부족의 타격을 받다

식량부족의 우려는 자기실현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것은 사재기와 투기를 촉발했고 공급을 와해시켜 결국 식량부족을 야기했다. 필연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가격이 낮을 때 대량으로 사농을 돈이 없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살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위기 시작 이후 수입가루우유의 가격은 세배로 뛰었다. 가난한 가족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대신에 설탕을 탄 차를 먹일 수밖에 없다.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가축 기르기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수입사료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엘니뇨와 연관된 가뭄으로 쌀 생산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쌀 가격은 1997년 7월에 두배로 뛰어올랐다.

식량부족은 수입으로 보충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고 어떤 경우든 외국수출업자들이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발급한 신용장을 거부하고 있어서 무역의 수레바퀴가 정지상태에 있다.

절망과 분노는 주로 기독교인인 화교들에게 향했다.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화교는 장사꾼이거나 가게주인이어서 가격인상과 부족에 대해 비난받는다.

그러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군부가 정부 자신의 실패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반화교감정을 불질렀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30여차례의 폭동에서 5명이 죽었고 수백개의 상점과 집과 교회가 파괴되었으나 화교들은 더 심한 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수입품의 가격폭등은 경제의 모든 부문을 타격했다. 의료 용품과 장비가 거의 구매 불가능할 정도로 비싸졌다. 자카르타 일부 지역의 60여개 병원이 가격인상과 환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의약품의 70%가 수입품이며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4개월치의 의료용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생산 의약품도 원료인 화학약품의 수입가격 인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피임기구도 부족한 상태다.

가난한 자들이 이것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지방의 병원들은 “밀바다으로” 돌아가게 되어 상처봉합에 영종한 재료의 실을 쓰고 모든 의료용품을 재활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위기가 홍역과 결핵같은 질병의 발병률을 높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식량생산이 감소했고 몇 년만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는 쌀을 수입했다. 주요 곡식인 밀가루는 전량 수입되며 설탕과 대두의 30%도 수입된다.

종이가격이 45배 상승하여 신문사들이 문을 닫거나 구독료를 인상하고 인원감축, 지면수 감축을 해야했다. 광고수입도 대폭 감소하여 국가가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있을 때 특히 중요한 대중의 정보에의 접근이 감소되었다.

수출소득을 늘리려는 단기책으로 정부는 원목 관세를 200%에서 10%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숲이 마구 파헤쳐지고 가공하지 않은 원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국내 합판 산업이 붕괴했다.

세계은행은 “남은 1998년 동안 7500만 저임금 일자리 창출”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1억 달러의 구제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개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3년 동안 구조조정 작업과 기존 및 향후 투자차관을 위해 450억 달러를 지불하는” 세계은행의 전반적인 계획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비평가들은 감동받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의 깊은 결함을 감추고 인도네시아를 발전의 모델로 계속 띄워주던 IMF와 세계은행의 과거 경력을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 좋은 점만을 말하여 늘 정부의 비위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판단들은 당시 외국의 펀드매니저들과 기부자들로 하여금 대부분 단기인 차관을 쏟아붓도록 고무했다.”라고 에코닛(Econit)이라는 싱크탱크의 책임자 리잘 라믈리(Rizal Ramli)가 말했다.

세계은행의 총재 제임스 울펜손(James Wolfensohn)을 만난 다른 사람들은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고 정부에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부정부패, 족벌주의, 허약한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은행의 인정은 독점 철폐의 개혁을 힘빠지게 했고 인도네시아가 돈을 마구 빌려대는 것을 도왔다고 그들은 말했다.

1998년 3월10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의 개혁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250억 달러 원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붙은 조건을 강조했다. 이것은 동일한 이유로 30억 달러 지급을 연기한다는 IMF의 결정을 바로 뒤이어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겨우 시작되고 있다. 거의 모든 예측들이 비관적이다. 가장 큰 이슬람 대중 조직인 NU의 한 지도자는 “IMF와 다른 정부들이 국민을 신경쓰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실업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배고파질 것이며 사회불안과 폭동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정부패가 계속되면 우리는 폭발을 목격할 것이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국내적 신용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점철폐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다.

C/ 한국

한국에서 위기의 심리학적 충격은 우선 쇼크였으며 민족주의적 분노의 폭발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구매력의 절대적 손실과 수천개의 소규모기업 도산, 그리고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환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IMF의 핵심조건중 하나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시장개혁"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고용주의 권리를 극적으로 증대시킨 극단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한 1996년 1월부터 임박한 문제였다. 항의가 거세지자 재빨리 철회되었다가 IMF개혁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것뿐이다.

실업은 경제위기의 주요 결과이고 일자리 상실과 기업도산이 경제의 위축을 야기한 IMF조치 때문에 가속화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성장둔화와 산업합리화의 결합된 효과는 현재의 실업률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두배 혹은 세배)으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관찰자들이 실제 수치가 1998년 말에 200만 즉 경제활동인구의 9%를 넘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맨손으로 쌓아올렸고 완전고용에 익숙해진 나라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노동연구소들은 여성들이 첫 번째 해고대상이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고용주의 눈에 "가정에서 필요로 하므로" 가장 먼저 해고될 것이라고 보고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위기가 시작된 이후 하루 약 200개의 회사들이 문을 닫으며 1998년 1월5일에는 340개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것은 4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거리로 나간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의 국제담당자는 또한 재벌들은 어려운 시기를 버텨갈 충분한 '지방분'이 있지만 노동력의 다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금흐름에 의존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1998년 2월6일 정부, 기업, 노조간에 국회를 통해 정리해고를 입법화하기로 삼자합의가 체결되어 사상 처음으로 대량 실업의 길이 열렸다.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IMF를 경제구원의 원천이 아니라 실업과 직업불안정성을 이용하는 배후로 여기게 되었다. 항의와 시위에서 IMF는 곧잘 "I am Fired(나는 해고되었다)"라고 지칭된다.

2월6일 합의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곤란, 인수나 합병같은 "긴급상황"에서만 정리해고를 하도록 허용될 것이나 이것이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고용주의 주관적 해석에 남겨질 것이라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경영진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60일전에 통고를 해야하고 기업이 살아나면 해고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지켜질 것 같지 않다.

이 주요 양보에 대한 대가로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얻었다. 교사들의 노조도 1999년 7월부터 처음으로 허용될 것이며 공무원들도 1999년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분담하는 고용안정기금이 처음 정부의 제안액수인 28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높아질 것이다.

가장 소리높은 반대파 노조연합인 민주노총이 서명한 합의의 유효성은 협약 준수를 거부하는 성난 노조원들에 의해 노조지도부가 축출되자 의심받게 되었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너무 크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회통과 가능성을 의심했다.

2월초 정부관료제 개혁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공무원 만명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 동시에 국무회의는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12개의 법안을 통과했다.

태국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5년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예산삭감이 있었다. 2월초 발표된 예산 조치에는 1997년 제출된 계획과 비교해 사회적 기간 설비 지출에 대한 13.1%의 삭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보다 4.2%가 감소한 것이다.

이것은 많은 우선순위 기간 설비 계획을 중단시킬 것이다. 서울-부산간 고속열차, 7개의 새로운 지역 고속도로, 서울의 지하철 신축 그리고 신공항 건설 등이 그 예다. 한국의 기간 설비에 대한 심각한 삭감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수정된 예산 총액은 1997년보다 겨우 3.3% 증가했으며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치이다. 국방예산 증가분도 15년만에 최저이다. 교육과 농수산업에 대한 예산은 각각 5.6%와 10.4%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공무원 월급 인상계획은 포기되었다. 1998년 인플레이션율은 IMF 목표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0-20%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가치를 재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비쳐진다. IMF, 재벌, 정부에 대한 맹렬한 비판자인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우리가 재벌 체제,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리고 관치금융관행에 잘 대처할 수 있다면 현재의 위기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성숙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IMF의 역할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개입 이후 IMF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 1980년대 초의 IMF 안정화 프로그램부터 비판하는 비정부기구와 진보적 좌익이 갑자기 안어울려 보이는 한편이 되었다.

비판은 몇몇 놀라운 방향으로부터도 나왔는데 전직 IMF 관료이자 하버드 국제개발 연구소 소장 제프리 삭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스같은 강경보수잡지, 미국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그리고 전직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수석인 마틴 펠트스타인(Martin Feldstein)과 시카고 학파의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포함된다.

토론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IMF 경제자문의 유효성과 적실성, IMF의 작동방식 그리고 최대주주인 미국과의 관계 등 근본적인 점들을 문제시한다.

종종 형편없는 충고를 하는 IMF

IMF에 의해 부과된 예산삭감, 이자율 인상과 세금인상 같은 공공부문건축정책들은 민간부문 부채 위기의 상황에는 부적절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도와주려고 했던 그 경제들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가속화했다. 제프리 삭스가 말했듯이 “통화위기는 아시아 정부의 낭비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주로 민간의 그러나 규제가 제대로 안된 금융 시장에서 만들어진 위기이다.”

그러나 IMF는 민간부문 실패의 진정한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정부의 과도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수단을 적용했다.

IMF의 거시경제적 요구사항은 통화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통화는 IMF 개입이후에도 더욱 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이것은 그 경제정책이 진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마술적 효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나라중 한국만이 투자 유입의 증가로 볼 때 회복의 기미가 나타난 유일한 나라이다 (그것도 여전히 장기 외국인직접투자라기보다는 주로 단기의 투기적 자금이다). 그리고 이것은 주요 채권은행들이 정부보증으로 민간 단기채무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야 일어난 일이다.

IMF는 또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실한 투자선택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을 그들의 나쁜 결정의 결과로부터 구해줌으로써 그들

이 미래에 비슷한 일을 다시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IMF는 또한 자본이동자유화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 아시아의 위기는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자본이동의 자유화시책 이후에 얻기 쉬운 외국금융을 지나치게 많이 차입한 민간부문의 위기이다. 그러므로 금융부문과 금융 이동의 더 많은 자유화를 요구하는 IMF의 정책 대응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금융적 취약성을 가중시키며 이들 경제를 미래의 위기에 더 몰아넣고 있다.”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1998년 1월 7일 헬싱키에서 연설하면서 “금융시장은 가장 생산적인 자금수혜자를 선정하고 그 자금의 사용을 감시하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므로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말까지했다.

구조조정 의 고통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대우에 대한 이중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시장에 맡겨진다(예를 들어 IMF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구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외국투자자들은 소유권에 대한 증대된 권리, 고전하는 아시아기업들에서 부채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아주 싼값에 집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부여받았다. 이 모두가 IMF구제금융에 포함된 외국인 소유권 규정의 변화때문이다.

IMF의 민간부채 구제는 또한 채무를 사회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시아와 IMF의 주요 출자국의 정부와 납세자들이 민간부문 실패의 부담을 지게 만든 것이다.

IMF는 월권을 하고있으며 다시 검증받아야한다

비평가들은 IMF가 설립협정에 규정된 위임권한을 넘어서 세계경제경찰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권세를 떨치는 자들의 합의에 따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국립경제조사연구소소장이며 레이건 대통령의 자문이던 마틴 펠트스타인은 IMF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정통성있는 정부에게 세밀한 경제 처방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경제처방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만장일치라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그는 또 IMF가 국가가 ‘지치고 힘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국내정치적 과정을 무시하거나 “아무리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국제수지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

의 정치체제가 책임져야할" 경제적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단기 금융원조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IMF가 국가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를 자신의 기술적 판단으로 대체할 도덕적 권리를 주지않는다."

IMF가 자기 자신의 용어로 표현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강 확인하기 위해서 설립협정의 원래 조항으로 돌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협의와 협조를 위한 기제를 제공하는 항상적 제도를 통해 국제통화 협력을 촉진한다
- 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용이하게하고 그로써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며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모든 회원국의 생산적 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 환율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들간의 질서있는 환율결정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회피한다
- 회원국들간의 통화거래와 관련한 다자간 지불 시스템의 설립을 지원하고 세계무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외환규제의 철폐를 지원한다
- 적절한 보호조항 하에서 회원국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가능한 본 기금의 일반적 자원을 창출하여 국제수지의 조절불량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신뢰를 준다
- 위의 항목에 따라 회원국들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줄인다

간단히 말해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나 민영화, 외국인투자 또는 공공부문건축조치와 같이 아시아에서 IMF가 요구한 핵심사안들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조는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을 촉진한다는 IMF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IMF가 한국,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달성하는데 실패한 목표이다.

IMF는 정부와 금융시스템의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IMF 자신은 투명성과 책임의 결여로 비난받아왔다. 다시 제프리 삭스는 핵심을 바로 찌른다. "물론 우리는 IMF가 무엇을 자문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IMF 프로그램과 지원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밀주의 자체가 신용을 갉아먹는다."

IMF는 또한 문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해결책을 적용하는 지적 거만함으로 공격받아왔다. 조셉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주요 문제는 "단순한 회계적 모형만을 사용하는 경제학자들이 정치적 권고를 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이는 "결국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로 날아가서 이들 자료를 보고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다음 정책 개혁을 위한 거시경제적 권고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몇주안에 이뤄지는" 상황을 낳는다.

IMF는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마지막으로 IMF와 그 주요주주인 미국간의 정책 및 권력 연계에 관한 근거있는 우려가 있다.

제멋대로의 자유화 의제에 대한 증가하는 국내적 저항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자신의 무역 목표를 밀고나가기 위하여 IMF와 APEC같은 기구에 더욱 의존하여야 한다.

바셰프스키(Charlene Barshefsky)는 하원에서 미국의 이익이 IMF에 의해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지를 증언했다. "IMF 구제안의 많은 구조개혁요소들은 그 나라들의 무역체제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만일 이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의 무역 정책 목표들을 보충하고 보강할 것이다."

미국이 어떠한 경쟁도 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위해 바셰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이어나갔다. "IMF에 대한 지지는...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계속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

IMF의 제1부국장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는 올해초 한 연설에서 이러한 견해를 강조했다. 거기서 그는 "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용이하게하고 그로써 높은 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며" 라는 협약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IMF의 주요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자신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일관성있게 무역 자유화를 촉진해왔다." IMF의 세계관과 그 가장 큰 주주인 미국의 그것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위기의 초반기에 1천억 달러의 자금으로 아시아의 통화 및 시장 불안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통화기금을 설립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좌절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일본은 돈을 내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은행들은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돈을 대출해 주었고 유동이 심한 통화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일본의 이익에도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그 이웃국들과 상당히 통합되어 있어서 성장둔화나 붕괴는 즉각적으로 일본에게 국내적 타격을 주게 된다.

한동안 일본은 IMF나 세계은행같은 국제기구들을 상대하면서 아시아적 특수모형을 옹호해왔다. 핵심적으로 일본은 빠른 탈규제, 국가역할의 축소, 자본이동자유화와 같은 "워싱턴 합의"가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따라온 아시아의 국가들에게는 최선의 길

이 아닐 수도 있으며 국가와 산업, 국가와 은행의 관계를 절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쾌한 일이며 기대되는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아시아통화기금은 IMF보다 더 유연하고 덜 독단적이며 “더욱 아시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사고에 대한 IMF의 독점을 깨고 시장을 새로운 생각과 경제적 패러다임에 개방시키는 좋은 아이디어같아 보였다.

결국, 일본은 “미재무성의 관료들, 특히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차관과 국제통화기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나야 했다. “그들은 대신 아시아 금융구제에서 IMF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했다.”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안이 빛을 보았더라면 경제위기의 과정은 꽤 달라졌을 것이다. IMF의 경직성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반면 아시아통화기금은 좀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IMF가 얼마나 서구적 신자유주의의 도구로서 간주되었는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시아적’ 접근은 수하르트 대통령을 다루는데 더욱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른다.

IMF는 이제 현금이 바닥났으며 추가적 자금의 동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미 정부는 IMF의 바닥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 자금지원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의회로부터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그 법안의 의회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에 따르면 결려있는 이해관계는 크다 : “자금지원을 못하면 IMF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아시아위기

미국이 18%의 투표권을 가진 것에 반해 유럽주주들은 IMF 투표권의 29%를 통제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위기에 대해 뒷짐을 지고있었다. 그러나 아시아 위기에서 현재 IMF의 역할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 같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17조는 개발협조의 원칙을 두어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로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통합하도록” 노력한다고 맹세하고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서두른 자유화 과정의 결과인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대가로 급속한 금융 및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는 현재의 IMF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적 개발”과 “개도국의 빈곤에 대한 싸움”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연료보조금의 제거같은 IMF의 조치는 분명히 빈곤을 악화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하는 위협이다. 빈곤 감소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는 것, 혹은 적어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지는 않는 것은 통화안정과 투자 신뢰의 회복이라는 IMF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여준다. 식량폭동과 범죄물결은 경제적 안정성을 낳지 않는다.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의장국이며 여기서도 빈곤퇴치와 개도국과의 정부간 관계 긴밀화라는 개발정책의 문구와 아시아위기에서의 그 행동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자기이름으로 세계은행과 함께 위기의 빈곤 충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신용기금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또한 IMF의 설립조항을 바꿔 자본이동자유화를 추구하는 더 많은 권한을 주기위한 움직임을 G7내에서 이끌고 있다. 1998년 2월 런던에서 열린 G7재무장관회담에서 아시아 위기의 교훈을 토론한 후 장관들은 “IMF협정에 자본이동개정안을 붙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권고했다.

아시아에서 그러한 자유화의 기록을 놓고 볼 때 적절한 대응은 안정과 성장을 침해하는 대신 개선시키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대신 빈곤을 줄이기 위하여 자유화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처럼 IMF의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한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토론과 협의를 요구한다.

A/ 태 국

IMF가 태국에 오기전부터 태국사람들은 전개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긴급해결책을 떠들썩하게 요구해왔었다. 그리고 이것은 차발릿 정부로 하여금 16개의 금융회사를 문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더 많은 회사들이 사실상 파산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래서 1997년 8월 14일 IMF와의 합의 발표직후 42개의 회사들이 목록에 추가되었을 때 반대가 없었던 것이다. 금융개혁 정책에서 IMF는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정치가들이 나라를 금융몰락으로 이끌었다는 태국사람들의 강한 심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안정화정책에 대한 비판

그것은 그후 몇 달간 논란의 핵심이 된 IMF 안정화 정책의 다른 일부였다. IMF의 처방은 자본유출을 막기위한 고이자율 유지와 재정흑자 달성을 위한 정부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두 요구사항은 금융위기와 결합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IMF 합의에 서명한 8월에 그 성장률은 1998년에 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1995년에는 8.7%였으며 1996년에는 6.4%였다). 이 수치는 11월에 0.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1998년 2월의 IMF 검토시에 -3.5%로 더 떨어졌다.

국내의 비평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이것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지나

치게 대출을 받아쓴 민간부문의 위기이다. 사실, 태국정부는 1996년까지 일관되게 흑자재정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민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후퇴 심화를 막는 역주 기적(counter-cyclical) 노력의 핵심요소가 된 공공부문을 쥐어짜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국정부와 IMF가 선전하고다니 목표 - 외국자본의 회귀가 사실상 심한 경기위축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외국자본은 태국의 긴축조치 수행 의지에 확신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었다.

어쨌든 1998년 성장 전망치가 예상보다 더 낮아지자 IMF는 태국정부가 국내총생산의 1-2%의 재정적자를 유지하는데 동의했다. 그것은 재정흑자라는 IMF의 원래 처방이 잘못된 것이며 투자에 대한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더 큰 성장둔화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 인정이다.

IMF 측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프로그램을 단호히 수행하는” 태국 정부덕택에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자 그런 적자재정을 허용한 것이라고 대꾸하며 취해진 조치들은 “개선된 시장의 감성에 갈수록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흑자에 대한 강조는 실제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야기했다. 투자자들에게 어떤 쓴 약이라도 먹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태국의 의지를 확인시켜서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목적을 제외하고 말이다. 아마도 재정흑자는 태국의 병든 금융부문을 살리고 IMF와 양자간 공여국들에 대한 172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상환하는데 쓰일 것이다.

“도덕적 해이”의 조장

IMF는 172 달러의 구제자금이 “국제수지 지원과 정부의 외환보유고 보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자금의 일부는 대부분이 민간부문이 국제적 민간은행에서 빌려온 태국 외채의 이자를 갚는데 쓰일 것이다. 물론 희망사항은 국제적 은행들이 태국의 단기외채를 만기연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의 자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상당부분을 감당할 현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는 태국민간부문의 부채가 상환될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고 IMF는 국제채권자들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것은 IMF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에 무게를 더해준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IMF가 그들의 최종적 안전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책임한 대출을 한다는 것이다. IMF는 언제든지 돌아와서 외국투자자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위험을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국 회복의 전략은 극도로 편협하고 위험하다. 태국 경제는 다양한 회복 방안을 마

련하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자본의 회귀에 의존해야 한다.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가 외국자본과 투자의 규제받지 않은 유입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더욱 위험하다.

흥미롭게도 이 전략이 추파를 던지는 대상들 중의 하나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American Express International)의 한 펀드매니저는 “지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외국투자자의 회귀이다. 모든 것이 외국투자자의 회귀에 달려있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IMF가 태국이 1998년에 120-140억 달러의 순 자본유출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IMF와 미국의 의제

금융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몇몇 요소들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불이행채무와 바트화 폭락에 의한 외채 증가의 결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태국의 금융기관들이 더많은 소유권을 주는 대가로 외국자본을 유입하여 자본을 재구성해야한다는 IMF의 주장이 특히 그러하다.

태국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의 합병은 하나의 대안이지만 IMF가 눈쌀을 찌푸린다. 더 많은 국가지분의 대가로 은행들이 국가자원과 결합하는 것은 IMF의 반국가주의적 경향으로 볼 때 가망성없는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들이 최장 10년동안 금융기관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한발 후퇴했다. 그리고 정부는 IMF의 다른 요구, 즉 외국기업법을 자유화하고 투자외국인들에게 토지 소유를 허용하라는 요구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다.

갈수록 많은 태국인들은 경제에 더욱 현저한 외국인의 개입을 추진하는 IMF가 정말로 주요 주주인 미국의 오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 미국은 더 자유로운 무역, 투자, 소유권 규정을 통해 태국에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미국 관료들은 사실 IMF정책과 미국 무역정책간의 상징적 관계에 대해 꽤 솔직했다. 미국통상대표 바세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

“태국은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을 포함한 핵심분야의 민영화를 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시장중심의 경쟁과 탈규제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B/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IMF 조건들 중 시행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이미 심각했던 상황에 어

면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는 없다. 현재까지 유일한 예외는 16개의 은행을 폐쇄시킨 끔찍한 지침이었다. 이것은 IMF가 내부 문건에서 인정했듯이 :
“아시아 상당지역에서 금융시장의 쇠퇴를 촉발한 은행공황을 야기했다... 이 은행폐쇄는 은행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용을 개선하기는커녕 새로이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7번째 연임으로 막강한 대통령이 된 76세의 수하르토와 IMF간에 벌어진 통화위원회 제안을 둘러싼 말싸움은 무엇이 중요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호전성, 무모한 밀어붙이기, 자기 이익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합된 통화위원회 논란은 수하르토와 IMF간의 적대를 요약해준다. 그것은 양측이 최고의 이해관계를 놓고 승부를 벌인 권력싸움이었다.

IMF는 자신의 자유화 의제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열망을 가진 한국의 김대중과 태국의 추안 립파이에게서 고분고분한 동반관계를 발견했지만 수하르토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동물이었다.

IMF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건들이 부패를 뿌리뽑고 (이것은 예전의 성공적 발전모델이라는 찬사를 대체하는 IMF와 세계은행의 최근의 관심사항이다) 시장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수하르토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IMF는 강하고 강제적이며 배타적인데다가 강한 관료제나 효과적인 기구들 없이 고도로 개별화된 기득권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세습국가와 외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하르토에 대한 공격은 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수하르토 가족들의 공개 발언은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이 얼마나 동일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IMF가 우리나라의 권위를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수하르토의 장녀인 시티 하르디잔티(Siti Hardiojanti "Tutut" Rukmana)가 설명했다.

갈수록 민족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경제와 조율되지 않은 ‘자유주의적’ 경제 원칙들”과 “1945년 헌법에 나와있는 ‘가족주의원칙’”사이의 전선을 그었다. 이러한 감정은 분명히 몇몇 그룹들과 공명했는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부의장 이만 타우피크(Iman Taufik)은 규제자금을 중단하기로 한 IMF의 결정을 정치적 행동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순전히 IMF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나온 것이든 그 행위를 문제시해야 한다.”라고 그가 말했다.

1945년 독립이후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해왔으며 족벌주의, 부패, 관료적 허약성,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보잘것없는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난 30년간 인상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매우 제한적인 정치적 틀과 결합된 제도적 취약성과 책임감의 부재는 세습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적·집단적 렌트추구(rent-seeking; 역자주·개방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않고 여러 진입장벽을 통해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활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특정한 이익집단들과 개인들이 권력자나 권력에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투자개방성, 빠른 성장 그리고 높은 수익률로 이익을 보는 외국투자자들, 은행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지지되고 강화되었다.

그 결과 수하르토의 가족과 친구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힘이 있다. 32년간의 권위주의적이고 때때로 억압적인 통치를 거치면서 효과적인 관료제도 없고 강력하게 잘 조직된 반대파도 없기 때문에 수하르토를 침해하려는 IMF의 그 어떤 시도도 채워질 수 없는 위험한 정치적 공백을 야기할 것이다.

NGO와 독립적 노조에 편중된 기존의 반대세력은 IMF의 역할에 대해 뒤섞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것은 IMF가 “정치적으로는 좋고 경제적으로는 나쁘다”라는 한 활동가의 묘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NGO활동가들과의 면담에서 그들은 은행과 금융부문의 더 나은 관리를 프로그램의 긍정적 요소들로 평가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에 대한 압력과 독점과 카르텔의 제거 등도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의 연료와 다른 분야에 대한 보조금 삭감,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동결 등.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가장 급박한 필요는 수하르토를 제거하는 것이며 IMF가 그것을 도울 것이라는 단기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주권이라든지 IMF가 신봉하는 앵글로색슨적인 발전모델이 인도네시아에게 최상인지의 여부등 더 장기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가능한 결과는 불쾌한 것이다. 결국 알고있는 악이나 알지 못하는 악이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선 수하르토와 IMF가 화해를 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가 고령이나 질병으로 물러날 때까지 수하르토체제에 묶여버리고 경제가 외국기업들에게 개방되어 경제적 주권을 상실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정도의 안정을 보장할 것이나 인도네시아 사회의 필수적인 정치 변화를 지연시키는데 불과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는 갈수록 불투명해보인다. 수하르토의

새 내각에 그의 골프친구이나 IMF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인 모하마드 밥 하산(Mohamad 'Bob' Hasan)이 통상산업 장관이 임명되었고 수하르토의 딸인 시티 하르디잔티가 사회부 장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와 IMF의 관계를 부드럽게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IMF가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IMF 퇴각은 대량 자본 유출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게는 IMF가 아닌 다른 선택이 있다는 징표가 있다. 일본과 독일계 은행들의 콘소시엄이 100-150억 달러의 안정화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기금을 통해 현금이 바닥난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융자후 일년후에 상환할 수 있다.

게다가 해외에 안전하게 투자된 수하르토 가족들의 재산은 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수하르토가 개인적으로 통화위원회에 자금을 대기에 충분한 정도이다.

심지어 IMF의 개혁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하르토의 부유한 친구들이 "IMF가 나간다면" 개인재산으로 통화위원회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그리고 한 싱가포르 은행가가 논평했듯이 "그들은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국내의 압력으로 수하르토가 퇴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국회 선출을 통해 수하르토가 1998년 3월에 새로운 5년임기에 돌입한 점으로 보아 물건너간 듯하다. 정부지출을 남용하는 하비비가 대통령직에 근접한 상황에서 서구는 수하르토의 건강과 장수를 빌고있을 지도 모른다.

수하르토와 IMF의 정치무대뒤에는 인도네시아의 진보를 계속 가로막는 빈곤, 배제 그리고 대중의 정치참여와 경제민주화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있다. 수하르토도 IMF도 이러한 더 광범한 발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직된 반대파와 대안적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그 과거를 닮을 지도 모른다.

C/ 한국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경우에 IMF가 그 주요 주주들과 구제금융의 주요 공여국들의 도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IMF는 여러방식으로 전범위에 걸친 무역, 안보 그리고 상업적 이익들을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이는 현대판 트로이의 목마로서 기능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에서 IMF에 대한 비판이 가장 강도높았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30여년 이상 한국은 자신의 경제적 운명의 주인이었다. 이 태도는 미국을 안달나게

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한세대만에 거지에서 왕자로 변모한 것에 대한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IMF에 대한 즉각적인 대중의 반응은 분노, 거부 그리고 이것은 그저 미국이 한국시장을 억지로 개방시키려는 또하나의 책략일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약간의 증거가 있다.

미국통상대표 바세프스키는 하원의 증언에서 "시장보다는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활동은... 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무역, 투자 그리고 경쟁에 대한 많은 특정한 구조적 장벽에 마주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주의적 국가를 후퇴시키고 국가-산업간 연계 (어차피 약화되고 있기는 했으나)를 파괴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이며 IMF 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재벌을 와해하고 국가와 산업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3장 참조).

바세프스키가 언급한 특정한 장벽들에는 수입통관절차 및 허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면허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 등이 있다.

IMF 합의에 따라 한국은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면허와 허가에 대한 규정을 자유화하고 금융부문을 외국인소유와 외국기업에 과감하게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분명히 그 결과에 만족한 바세프스키는 IMF구제안이 "한국에서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재벌들의 용량초과의 공격적 수출 방식을 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조건을 완화하다

IMF합의가 12월초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의 주식시장은 끈두박질쳤으며 원화는 더 폭락했다. IMF의 마술이 투자신뢰를 만회하여 시장을 진정시키지도, 통화를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 IMF의 긴축정책 요구는 국내 대출을 틀어막고 이자율을 높여 위기를 심화시켰다. 지금까지 금융부문의 위기였던 것이 실물경제의 위기로 변한 것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곤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은 IMF 계획에 앞선 즉각적인 현금의 주입이 없을 경우 정부를 지불불능의 위험에 빠트릴 정도가 되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자금을 내주기 전에 몇몇 핵심 사항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허약한 상업적 은행들의 폐쇄, 외국 인수자를 유인하기 위한 위험자산의 감소, 1997년 말까지 채권시장 개방, 이자율 자유화, 1999년 중반까지 자동차와 여타 핵심 일본 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그리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지점 설립 조기허용 등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 돈을 받기도 전에 이차적인 조건에 종속된 것이다.

안보 이익은 한국에 관한 어떤 논의에서도 표면에 드러났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

르면 정부가 IMF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미국펜타곤이 시기적절한 전화를 걸어 중요한 상업적 계약이 걸려있으므로 국방예산 삭감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제 프로그램의 시행 한달만에 IMF는 일부 조건을 완화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5%에서 9%로 올려잡았고 통화증발을 9%에서 14%까지 허용했으며 재정흑자 요구를 철회했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 기한을 연장했다. 특히 이 마지막 조치로 인해 은행들은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모든 대출을 동결시켰다.

안정화 정책이 사실상 불안정화 효과를 가졌을뿐 아니라, 규제되지 않은 차입이 위기의 핵심 요소들 중 하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융부문의 개방도 필요한 것과 정반대였다. 과거에 조심성없이 행동한 투자자들이 더 적은 규제하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IMF가 투자자들을 그들 자신의 결정이 야기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은 한국에서 특히 타당한 것 같다. 비록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단기 외채 225억 달러 중 약 95%를 1년에서 3년까지 만기연장하는데 합의했지만 (이자율은 LIBOR 국제금리 수준을 웃도는 평균 2.5%) 이것은 정부가 전체 액수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약속한 이후의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처럼 IMF와 주요주주국들은 김대중이라는 고분고분하고 기꺼이 나서는 동반자를 발견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력서는 건전했으며 그는 수십년간 한국을 통치해온 군사정권과 준군사정권에 대한 용감하고 단호한 반대자였다. 그는 또한 막강한 재벌에 대한 통렬한 반대자이며 예전의 동맹인 노조운동을 협상태이불로 데려올 수 있다 (물론 이 동맹관계는 노조운동이 한국에서 유일한 반대파의 목소리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러나 김대중의 경제 이력서는 덜 인상적이며 IMF, 미국 그리고 일본을 만족시키려는 과도한 노력 속에서 한국이 성장과 어느정도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준 개발전략의 독특한 요소를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6. 결론과 권고

결론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은 모두 지난 10여년간 인상적인 성장률로 인해 ‘아시아의 호랑이들’로 불려왔다. 각자가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근거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

택해왔지만 경제정책의 다른 측면에는 상당한 상이점이 있다. 국가의 역할, 산업정책, 무역 및 금융자유화의 정도와 성격 그리고 시장 개방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통점 한가지는 민간부문이 갈수록 외국금융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급속한 자본이동 자유화와 세계금융흐름의 냉혹한 확장에 의해 가능해진 중독이다.

많은 면에서 아시아의 위기는 전혀 “아시아의” 위기가 아니며 시장,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급속한 금융자유화를 다루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세계적 위기이다.

특히 이자상황이 불가능한 높은 민간부채율은 자본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점, 각국 정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상황을 따라잡는데 필요한 투명성, 제도적 능력, 규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급속한 자유화는 지속가능하고 형평한 발전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아시아의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간적 위기이다. 수십년간의 사회적 진보가 후퇴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빈곤과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의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 더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식량폭동과 항의가 확산되는 반면 수하르토 정권은 완강하게 권력을 부여잡고 있어 국가의 장기적 활력이 위협에 처해있다.

위기는 IMF의 유효성과 적실성을 시험하였으며 두 측면에서 모두 빈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IMF가 처방한 정책은 경제위축을 가속했고 통화를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시장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IMF가 요구한 공공부문 긴축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위기였던 것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었다. 사실상 IMF는 민간 부문의 부채를 사회화시켰고 노동자들과 빈곤계층에 대한 이미 파괴적인 위기의 충격을 가중시켰다.

구조조정과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자리 상실과 가격인상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가장 심하게 타격했다. 그것은 또한 위기를 가속화했던 투기적 투자에서 이득을 본 외국은행과 금융기관들보다는 돈 빌리기가 쉬웠던 시절에 차입을 했던 국내기업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장래의 동일한 과오를 장려하게 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했다.

IMF가 부과한 조건들은 구조조정과 정책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IMF의 권한을 벗어났다. 그것은 설립협정에 규정된 IMF의 역할과도, 그리고 경제위기의 원인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특히 IMF는 자본이동자유화의 주요 옹호자가 되었으며 G7 정부들은 현재 설립협정을 개정해 이것을 IMF의 주요 임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말로 그들은 이 움직임을 아시아 위기에 대한 그들의 대응의 일부로 보고 있다. 성급한 금융규제완화가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놓고 볼 때 IMF를 그 과정의 책임자로 올려놓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경솔한 짓이다. 기차가 탈선하고 있을 때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IMF의 실제 활동과 고위급 미국 정부관료들의 공개적 발언들은 모두 IMF가 곤란에 빠진 국가들의 이익보다 주요 주주국들 - 특히, 미국 - 의 이익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IMF는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 수준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IMF에 의해 강요된 해결책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무비판적 승인은 아니다. 이들 국가에서의 경제발전은 보건, 교육 그리고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 착취, 천연자원에 대한 공공 통제력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나 정치참여의 확대없는 성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은 매우 컸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는 과거에 취해진 경제적, 정치적 방향성을 재평가하고 경제적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발전 모델을 고안해낼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확실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민중 조직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슬프게도 정반대 방향으로의 추진력이 더 크다.

브레튼 우즈 기구들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해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내부에서조차 커져가고 있다. IMF 이사회에서 가장 큰 투표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정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정부들은 그들의 IMF에서의 투표와 로비가 빈곤퇴치와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 추구라는 그들의 정책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 정부들은 측면에 물러나있다가 아시아 정부들에게 IMF의 요구에 따르라고 촉구할 때 미국을 지지하는 합창단으로만 등장했다.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워싱턴에 근거하지 않는" '포스트 워싱턴 합의'를 요구해왔다. "새롭게 등장하는 합의의 한가지 원칙은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솔직한 인정, 더 많은 겸허함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겸허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긴급한 주목이 요청된다. 즉, 현재 구성된 IMF의 역할, 정책, 책임 그리고 적합성과 국제금융거래의 관리를 위한

세계적 메카니즘의 설치이다.

권고

IMF에 대하여 :

- ◆ IMF와 세계은행을 대체하거나 그들의 설립헌장을 개정한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브레튼 우즈 기구들의 현 세계경제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 한편, 다음과 같은 몇가지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

- ◆ IMF의 역할을 환율급변이나 국제수지 곤란으로 인한 무역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에 엄격히 한정한다.
- ◆ 자본이동자유화를 포함하기 위한 권한의 확대와 같은 IMF 설립헌장의 개정에 반대한다.
- ◆ IMF의 단기적 부채청산이나 안정화 임무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다른 기구들의 장기 개발 임무를 확실히 분리한다.
- ◆ IMF와 세계은행간의 교차조건을 철폐한다.
- ◆ IMF 자금지원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선량한 관리 등 모든 조건들을 절연한다.
- ◆ IMF를 재구성하여 투명성과 책임을 증대시키고 IMF에 대한 출자금 수준에 상관없이 회원국들간의 평등을 고양시킨다.
- ◆ IMF 자문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하여 그것이 "국가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지배적 합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 특히, 유럽연합과 아시아 정부들은 이사회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이용해 위에서 언급한 개혁들을 추진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 IMF가 위의 노선들에 따라 개혁되지 않는한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 아시아통화기금같은 지역적 주도기구들이 추가적인 자본을 동원하고 IMF의 편협한 정책처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금융이동에 대하여 :

- ◆ 더 이상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이동, 특히 단기적 투기자본의 이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며 필요하다면 통제할 메커니즘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부채에 대하여 :

- ◆ 분명한 규정과 파산절차에 근거하여 민간부문 부채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규정과 절차는 국제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회수불능의 민간부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주민 인권 문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고유한 개성을 지니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날 때 한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권리로써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존엄한 진리를 간과할 때가 빈번하다. 특별히 이주민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공공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번 장에서는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루려 한다. 우선 이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보여주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뒤 그 중국적 지향점을 세계 이주민 인권 선언으로 맞추어 갔다. 그래서 이주민